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39-01

국민농업헌장 제정 연구 보고서

2014. 10.

21세기 한국사회와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농업포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국민농업헌장 제정 연구 보고서

2014. 10.

21세기 한국사회와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농업포럼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민농업현장 제정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0.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정재돈

책임연구원 : 정책위원장 정명채

연구원 : 사무국장 임성규

사무차장 채선욱

연구보조원 : 간사 최수지

【목 차】

제1부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2. 연구 내용 및 범위 9
3. 연구 추진 방법 12

제2부 국민농업현장의 제정 배경과 의의

1.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농업의 필요성 23
2. 국민농업의 개념 정립 31
3. 국민농업현장 제정의 의의 38

제3부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 43
2. 농업·농촌의 미래 다원적 가치 및 트렌드 변화 48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53

제4부 국민농업현장의 제정

1.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75
2. 국민농업현장의 제정 절차 및 과정	93
3. 국민농업현장의 구성 및 특징	95
4. 국민농업현장(안)	97

제5부 발전방향 도출 및 정책 제안

1. 국민농업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	103
2. 국민참여형 실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06

부록

국민농업현장 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	111
-----------------------------	-----



제1부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의 필수 요소
 - 환경오염 심화,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농촌사회 유지, 경관보전 등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가치는 더욱 주목 받고 있음
 - 농업·농촌·식품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지도는 매우 높지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는 낮아지는 추세임

[표 1-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인지도 및 지불의사 변화

항 목	연도	인지도(%)	지불의사(%)
박대식 외	1999	-	68.4
안윤수 외	2003	90.3	-
김동원 외	2006	90.4	52.8
김동원 외	2007	87.3	39.1
김동원 외	2008	92.0	40.5
김동원 외	2009	91.7	50.3
황정임 외	2009	94.1	38.2
김동원 외	2010	91.6	59.7
김동원 외	2011	94.0	52.7
김용렬 외	2012	-	48.5

자료 : 김용렬 외(2013),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냄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국민이 실천하는 구체적 활동과 참여로 연결하여야 함
 - 기존의 농업·농촌 홍보가 애국심 호소 및 당위성 강조, 소비 촉진에 집중되어 한계가 있음
 - 특히, 다자협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전면화 이후에는 국민과의 접점형성이 미흡한 실정임
 - 대부분 국민이 농업·농촌에 우호적이지만 공익적 가치 등에 대해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구체적 활동과 참여는 미미한 현실에서 구체적 실천활동에 대한 제안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농업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의 국민농업헌장 제정과 공포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명문화
 -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는 등 국민적 반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포
- 국민농업헌장 제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농업·농촌의 상을 정립하고 함께 실천하는 참여방안을 도출
 - 국민농업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 농업인은 물론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 국민농업헌장 제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조성

2. 연구 내용 및 범위

1) 개요

- 연구는 국민농업 정립 및 배경 연구,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재정리, 현장 제정 및 실천활동 제안의 3가지로 구성



2) 국민농업현장의 제정 배경과 의의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농업의 필요성
 - 농업·농촌을 둘러싼 각종 지표가 양적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 전략을 도출
 -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움직이는 국민농업의 필요성 조명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정리
- 국민농업의 개념 정립
 - 국민농업의 정의 및 추진주체
 - 국민농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 국민농업헌장 제정의 의의와 배경

- 사회의 각계각층과 연계한 국민참여형 실천 활동을 제안하는 국민 농업헌장의 제정 이유와 의의
- 국민농업헌장의 활용 방안 및 기대성과

3)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

□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 정리

-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문헌 및 국민 인식 조사 분석을 통해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요구 정립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역할 기술

□ 농업·농촌에 대한 트렌드 변화 분석과 국민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국내외 농정 기조 변화 및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분석
-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우호적 국민의식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향 도출

□ 국민이 공감하는 농업·농촌을 위한 키워드 도출

- 국민과 공감하는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국민운동 및 캠페인 사례 조사
- 국민농업실현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키워드 도출 및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상대적 중요성 파악

4) 국민농업현장 제정

- 소통과 공감의 국민농업현장 제정
 - 다양한 현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현장의 체계 정립
 - 현장 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요 키워드의 배치 및 문구 정리
- 교육·문화·복지·환경·노동·경제 등 각 부문과 농업·농촌의 연계 발전 방안 제시
 - 사회 각 부문별 농업·농촌의 연계 발전 방향 제시
 - 구체적 실천 활동 중심의 부분별 연계 방안 문구 정리
-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과 참여방안 정립
 -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 정리
 - 계층, 연령별 국민농업 실천 활동 참여방안 마련

5) 발전방향 도출 및 정책제안

- 국민농업 현장의 활용도 제고 방안
- 국민참여형 실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제안

3. 연구 추진방법1)

1) 연구 단계 및 방법

□ 사업에 대한 기본이해, 설문조사, 현장제정, 정책지원 방안 제안의 4 단계로 추진

연구 단계	주요 내용	연구 방법
1단계 기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문헌 및 국민 인식 조사 분석 - 국내외 농정 기조 변화 및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분석 - 국민과 공감하는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 및 캠페인 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사례조사
2단계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계 전문가 풀을 형성하고 전문가 협의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주요 키워드 및 현장에 담아야 할 각 항목을 구성 - 농민단체는 물론 각계각층 시민사회에 국민농업 현장 제정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고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간담회 실시 - 관계자 인터뷰
3단계 현장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계각층 대표로 구성된 국민농업현장 제정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계층별 실천사항 도출 - 국민농업현장의 방향 설정 회의(1차) 후 분야별 의견수렴 절차 거침 -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고 최종 내용선정 및 확정 회의(2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위원회 운영 - 공청회 실시 - 관계자 인터뷰
4단계 지원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 도출 - 연계 제도 등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연구 - 제정위원회 자문

1) 국민농업현장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3부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다룸

2) 국민농업현장 제정위원회

□ 국민농업현장 제정위원회 구성

- 국민농업현장 제정위원회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분야	이름	직책
1	위원장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2	농민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3	농민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4	농민	홍미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5	농업계	정재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6	농업계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
7	소비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8	생협	이상국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9	환경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위원장
10	복지	조흥식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11	의료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12	문화	이철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판화가
13	지역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교수
14	교육	임재택	생태유아공동체 대표,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5	식품영양	정혜경	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 회장,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교수
16	식문화	김종덕	슬로푸드문화원 이사장, 경남대학교 사회학과교수
17	학 계	김완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8	청년학생	장시내	슬로우청춘 코디네이터
19	연구총괄	정명채	대한민국발효식문화포럼 상임대표
20	간사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 국민농업헌장 제정위원회 운영 현황

- 2014년 7월 8일(화) 1차 제정위원회 개최, 국민농업헌장 제정 배경 및 위원 소개, 국민농업헌장 제정 연구계획 발표, 국민농업헌장 제정 추진방향 논의
- 2014년 10월 16일(목) 2차 제정위원회 개최, 국민농업헌장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1차 위원회, 국민농업헌장 제정 추진방향 협의 내용

- 국민농업헌장 제정에 매몰되지 말고 이후 국민이 함께하는 캠페인 등 실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국민농업의 개념과 중요성,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제시해야 함
-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하되 표현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쉽게 표현하여야 함
- 전문과 행동강령 형태로 구성. 제정위에서 1-2페이지 분량의 헌장을 확정하고 연구팀에서 의미에 대한 해석을 진행
- 연구진에서 초안을 도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 위원들의 전문분야 등에 대해서는 자문 실시. 전반적인 형태가 도출되면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확정
- 제정과정에서부터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

□ 2차 위원회, 국민농업헌장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여러 차례 수정된 헌장의 문구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
- 특히, 국민농업의 비전과 관련하여 생산자, 소비자 및 국가의 역할

을 분명히 하고 문구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었음

- 또한 미래세대에게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는 어르신 문구에 대해서도 의견이 집중되어 정리함

3) 국민농업헌장 간담회

□ 국민농업헌장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요

- 국민농업헌장 제정을 위해 농민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날짜	분야	비고
1	8월 27일	농업관련 단체 실무책임자	11개 단체, 15명
2	8월 28일	농업계 원로간담회	15명
3	8월 29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전국 임원	20명
4	9월 18일	기톨릭농민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전국 집행위원회	14명
5	9월 24일	2014 세계 가족농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22명

□ 헌장의 제정 등 절차와 과정에 대한 사항

- 농민단체별 접촉과 설명, 의견수렴을 통해 농민단체들이 사후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위상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도 논의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젊은 층을 겨냥하여, 젊은 사람의 인식을 조사하여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고 헌장에 내용을 담아낼 필요가 있음

□ 현장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 농민의 권리가 아닌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 스스로가 수행해야 할 농업에 대한 역할 및 연관성을 부각하여야 함
-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개인이 자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은 생산자, 도시는 소비자로서 농업 생산물을 사고파는 관계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농촌 공동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농업에 대한 측은지심은 벗어나서 농업이 나의 '일' 이라는 생각이 반영되었으면 함. 세계평화를 담아둘 수 있을 정도로 온 생명을 살리는 노래 같은 현장이 되었으면 함
- 축산업이나 육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적정량 섭취를 통한 바른 식생활 방법도 제시
- 귀농귀촌, 안전, 안심, 건강 등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한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표현하여 반영
-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과 국민농업현장 연계하여 제정하여 식문화가 살아있고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필요함
- 현장의 정신과 뜻을 담은 슬로건도 개발

□ 현장의 표현에 대한 사항

- 제목을 쉽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보전문가 등의 자문도 필요함. '국민농업현장'이라는 표현은 현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현장에 담은 어휘선택을 대중적 언어로 쉽게 하여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어원이나 유래 등을 고려해서 반영

(식량-먹거리)하고 한문보다는 가급적 순 우리말 사용을 권함

-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되 그 방법은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되었으면 함

□ 현장의 활용에 대한 사항

- 국민농업현장을 제정한 후 즐거운 농업, 3D 제작물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현장 제정과 공포도 중요하나 폭넓은 보급을 통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과서 반영도 추진
- 현장이 제정되면 해설과 함께 책자를 제작하여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 제정과 공포가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 따른 생활실천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들이 계속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작업도 중요

4) 국민농업현장 제정 공청회

□ 국민농업현장 제정 공청회 개요

-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 농업과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우리 사회 제 부문과의 연계발전, 계층별 실천방안을 국민농업현장을 제정함에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 국민농업현장 공청회를 주제로 실시
- 2014년 10월 1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각계각층 70여명 참여 실시
-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 국민농업현장(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공동체, 미래,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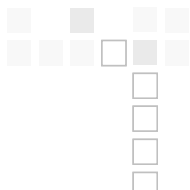
생산, 소비, 정부를 대표하는 토론자의 의견을 청취

□ 공청회 주요 내용

- 국민농업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시각이 너무 강함. 일반 시민들과 각계각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임.
- 국민농업현장의 제정 목적과 실천 활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현장의 실행방안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정책화되고 다양한 연계활동이 필요함
- 또한, 국민의 힘을 모아 농민, 소비자, 식품업체, 정부 등 각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장을 구체화하여야 함. 가축농, 친환경농업, 통일지향 등 쟁점이나 방향을 잡아서 기술해야 함. 식량안보 보다는 식량주권이나 식량보장이 바람직함
- 영양 식생활 그리고 식과 농의 연계가 중요함. 농업·농촌의 가치에 식의 가치가 덧붙여야 함.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를 포괄해서 접근하고 감사와 존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화하여야 함
- 현장이 어떤 필요로, 누구의 요구로 만들어 질까? 국민적 관심을 받을까? 밑으로부터의 필요와 요구를 확산시키면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공동체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골은 청년에게 다양한 일거리와 가능성을 제공함. 청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농촌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음. 청년층에 비전을 주고 참여를 독려하고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 했으면 좋겠음
- 농업·농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가

져가야 함.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꾸준히 실행해 가야 함

- 농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었으나 농민과 농촌은 없음. 농민이 중요함. 사람중심의 농업으로 농민이 살아나도록 해야 함. 가족농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이 전면화 되어야 함
- 국민의 관심이 높은 먹거리 보장과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전통, 역사, 문화를 계승하는 내용이 강조되어야 함
- 독일과 같이 쟁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아젠다화 하는 것이 필요함. 노조와, 정당, 종교단체가 모두 다 참여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사회에서도 필요함. 결과도출이 다소 늦더라도 과정을 충실하게 하면 좋겠음.
- 과정이 농업인 중심임. 현장이 만들어 지는 과정 자체가 소통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국민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임. 농업인의 날 선포를 앞두고 있으나 날짜를 정하고 진행할 일인지 의문임. 과정에 더욱 충실해야 함
-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함. 각계 각층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고시 형태를 이야기 했는데 법제처 등의 검토 받아볼 필요가 있음. 국회를 통한 청원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부

국민농업연장의 제정 배경과 의의

1.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농업의 필요성

1)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농업의 필요성

□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표²⁾의 악화

- 2012년 농가수는 116만호로 전체가구수의 6.4%이며, 농가인구는 2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 차지, 국가전체 고용에서 농식품 산업과 농촌은 각각 14%, 20.2% 차지
- 농가의 규모화가 진전되는 한편, 고령화 등으로 소규모 농가도 지속 증가하면서 농가간 양극화 문제 노출. 2012년 60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65%에 달하고 65세 농가인구의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중)은 35.6%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고령화율의 3배를 넘김
- 농가소득 정체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1980년 95.9%에서 2012년 57.6%로 감소하였고,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2011년 23.7%). 최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비중이 감소하고 농업외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며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이 농가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2000년 이후 농가 부채는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농가 자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8.1% 증가율 기록, 농가의 부채비율은 점차 개선
- 지난 30연년간 농림어업 취업인력과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자본 투입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업부가가치는 꾸준히 증가
- 2012년 농식품산업의 총부가가치(GVA)는 67.3조원으로 농림업

2)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상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를 기본으로 김윤성외(2014)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농협경제연구소를 참조

GVA는 26.7조원, 식품산업 GVA는 40.6조원임. 최근 10년간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00) 8.8% → ('05) 6.9 → ('10) 5.9 → ('12) 5.9] 및 곡물자급률[('00) 29.7% → ('05) 29.4 → ('10) 27.6 → ('12) 23.6]은 감소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액은 '00년 이후 연 11.6% 증가하였으나 수입도 11%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폭이 3.4배 확대
- 농촌(읍·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18.0% 수준인 876만명이나, 최근 감소세가 완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면지역 중심으로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이 증가('05: 2,048개 → '10: 3,091)
- 도농간 주택·의료·교육·문화 등 거주 및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 도시와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임. 도시와 농촌의 30년 이상 주택 비율은 각각 6.6%, 20.7%이며 상수도 보급률 99.4%, 56.1%, 의료기관당 인구수도 571명, 1,033명 수준임
- 유통환경 변화로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나 4% 수준에 불과함
- 2000년대 이후 식품 소비의 양적인 증가는 정체됨.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1인당 연간 쌀 소비량, ('70) 136.4kg → ('90) 119.6 → ('10) 72.8 → ('12) 69.8], 채소·과일은 정체, 축산물은 증가
-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2012년 기준)은 OECD의 주요 15개국이 평균 11.4%이며, EU의 경우 18.0%, 일본 13.1%, 미국 6.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6%에 불과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³⁾, 다기능 농업⁴⁾ 패러다임 등장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농촌은 식량생산 기능 외 다양한 기능

3) 김윤성 외(2014) 참조

4) 황수철(2014), 농정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미발표 참조

과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농촌진흥청에서는 2006년 기준 경제적으로 약 67.7조원에 달한다고 추정

- 농업이 유지됨으로써 식량생산 외에 식량안보, 경관유지, 홍수조절, 전통문화 보전,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외부경제효과가 발생하고 농촌은 우리 국토의 76%를 차지하여 국토자원을 보존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임
- WTO의 농업협정문에서도 식량안보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Non-Trade Concern)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농정의 근간을 이루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최근에는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등장한 이후 OECD 및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심화된 다기능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이 대두되고 있음
- 다기능 농업은 OECD(2001)에서 개념화한 ‘농업부문에 의한 상품(식료와 섬유, 생산물의 변형, 기타 시장화할 수 있는 생산물, 농촌 투어리즘, 고령자나 취약자의 돌봄)과 비상품(식료보장 및 식품안전, 농촌적 삶의 방식과 전통, 토양보전, 농촌경관, 생물학적 다양성, 건강 및 기타 비상품적 생산물)의 결합생산’이라는 실증적 정의와 ‘무언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 내지 목표의 개념’인 EU의 공동농업정책(GAP)에서 강조되는 규범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다기능농업은 식품생산과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불신이 동시에 표출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농업정책의 개혁과정에서 소득압박에 직면한 농가의 대안활동이 확산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새

로운 관계형성을 통한 농식품시스템 구축, GAP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과의 결합을 통해 확대됨

- 다기능농업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부가되는 새로운 활동들이 늘어나는 확대, 농식품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 농산물생산의 고부가가치 지향이 강화되는 심화, 외부자원의 의존성을 줄이고 내부자원을 재조직하는 재편성을 특성으로 함

□ 환경자원 분야 메가트렌드 : “기후변화와 식량·자원 위기”⁵⁾

- 환경자원 분야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는 영역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증가, 식량·물·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산업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등으로 요약
-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자원과 화석연료에 대한 남용으로 인한 자원고갈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도 기상관측이 시작된 1961년 이래 재산피해가 가장 컸던 10번 중 6번이 2001년 이후 발생하였으며, 농업부문 역시 온난화에 따른 재배지 이동 및 축소, 이상 저온 등에 따른 동상해 및 폭설피해가 잦아지고 있음
-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5차 보고서(2013)에서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RCP6) 8.5시나리오)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3.7℃,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 온실가스 저감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RCP 4.5시나리오) 지구 평균기온은 1.8℃, 해수면은 47cm 상승.

5) 정기수외(2014), 농업·농촌 유망일자리 발굴 조사 연구, 농촌진흥청

6)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농도경로. 기후변화 요인 중 온실가스, 에어러솔, 토지이용변화 등의 시나리오 중 대표값

[표 2-1] IPCC 시나리오별 미래기후 전망

새로운 시나리오	기온(°C)		해수면(cm)	
	2046~2065년	2081~2100년	2046~2065년	2081~2100년
RCP 2.6	1.0(0.4~1.6)	1.0(0.3~1.7)	24(17~32)	40(26~55)
RCP 4.5	1.4(0.9~2.0)	1.8(1.1~2.6)	26(19~33)	47(32~63)
RCP 6.0	1.3(0.8~1.8)	2.2(1.4~3.1)	25(18~32)	48(33~63)
RCP 8.5	2.0(1.4~2.6)	3.7(2.6~4.8)	30(22~38)	63(45~82)

자료)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2013.

- 수자원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약40%(약 2.7조m³)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학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부족량의 30%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식량·물·에너지의 3대 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며, 국가 간 자원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농업생산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중심의 농정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을 둘러싼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식품안전과 안정적 공급이라는 기본 사명도 위협받고 있음
- 전면적인 FTA 확대 및 TPP, RCEP 등 권역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대두되어 개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 농업·농촌은 성장의 정체(경쟁력 내지 경제성(효율)의 문제)와 소득 하락(형평성 문제)이외에도 환경문제, 식품안전, 식량, 지역, 에너지, 자원위기 등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7) 황수철(2011), 한국 농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2011 대안농정대토론회 요약 발제

-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우선, 효율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국토환경보전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정책의 기본틀도 그에 맞춰 짜나가야 함

□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움직이는 국민농업의 필요성

- 생산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식품의 안전성과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농업, 농정추진이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국민농업으로 거듭나야 함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과 안전을 토대로 가치경쟁력을 극대화 하여야 함.
- 농정의 기본체계 또한 환경성이 강화된 농업, 안전한 식품산업 육성 및 먹거리 체계 구축, 계획적 환경보전으로 어메니티를 증진하고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농촌공간으로 각분야의 정책을 재구성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또한, 정부-시장-사회경제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정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체계의 구축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학으로 시발점이자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운영하는 구체적 대안으로서 의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2)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의 도입

- 1998년 10월 중장기 농정추진방향을 담은 '농업·농촌 발전계획' 발

표, ①주곡자급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②농업인 소득향상, ③농촌정주환경개선과 농촌주민복지증진을 농정목표로 제시

- 김대중정부는 UR농업협정과 WTO체제 출범을 거치며 회자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을 체계화하여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강조하고 환경농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⁸⁾
- 농림부에서 농·소·상·정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농정이 도입되고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슬로건을 제시하기도 함
- 외환위기 직후 출범하여 긴축재정금융이 화두가 되었고 농업부문도 농가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으나 농림부가 농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쪽으로 눈을 뜨는 시기였고 각종 직불제의 도입을 확충하여 국민농업의 단초가 마련된 시기임

□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을 5대 목표로 제시
- 스마트 농정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로 쌍방향 맞춤형농정 강화, 지방농정 강화, 농정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 환경·경관 보전 및 가치 공감을 선정하여 국민농업의 요소를 다수 포함
- 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창조농정, 배려농정과 함께 소통농정을 강조
- 즉,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농업·농촌에 첨단과학기술을 융복합하여 6차산업과 기술농업을 실현하는 창조농정과 국민행복 구현을 위해 경쟁력 강화 정책과 함께 소규모 농가와 고령농가를 위

8) 정영일(2014),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20년, 한국 농업·농정의 회고, 전망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한 배려농정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 농업인, 소비자와 소통하는 소통농정을 천명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출범 및 활동

-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기존 정책에 대해 국민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점검·평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정부 농정의 구체화 및 농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 제기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FTA, 기후변화, 저성장, 고령화·양극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시급
- 국민 참여·소통의 장으로서 농식품 관계자 및 생산자·소비자·학계·언론·일반국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
-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농정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농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출범하여 활동함
- 본위원회와 함께 행복농촌분과, 희망농업분과, 신뢰받는 식품·소비자 분과, 국민사랑 축산분과, 스마트농정분과, 특별분과(유통포럼)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국정과제 및 농정이슈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토록 함

2. 국민농업의 개념 정립⁹⁾

1) 국민농업의 개념

- 국민농업은 농업·농촌의 문제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속에 국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농업을 지향하는 도농상생의 농업,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임
- 농업·농촌은 국민 경제와 국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최소 기본요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임
- 농업농촌의 문제가 농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주거·교통·환경 등 국민 생활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는 물론 미래세대의 교육 및 건강 등이 농업·농촌의 문제와 연계되어 농촌·농민과 도시·소비자가 상생·협력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함
- 국민농업은 소비자 국민과 생산자 농민의 이해관계를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끼는,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생활자'로서, 국민전체가 직접 농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함

2) 국민농업의 목표

- 국민이 주체가 되어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며,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함

9) 정재돈(2008),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와 농업·농촌의 가치, 국민농업포럼.에서 발췌하여 요약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

-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먹거리 기본권)에 속하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안전한 먹거리의 보장은 무엇보다 국내 먹거리 자급력 제고에 의해 추구되어야 하며, 그것은 식량주권 실현임
- 또한 안전한 먹거리의 보장은 생태환경 친화적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실현됨. 먹거리와 에너지 자원, 생태환경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농업의 중요한 목표임

□ 농업인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권 보장

- 대한민국 헌법 10조(행복 추구권),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하여 농업인은 도시민 못지않은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주거, 교육, 문화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규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농업인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의 보장은 '농부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말하며, 농부의 지속 가능성 보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조건임

□ 도농 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건설

- 농업인의 생활권 보장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도시 생활자와 농촌 생활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끼는,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생활자로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순환, 농업인간 협동하는 상생,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 내에 귀속되는 경제 순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자연 순환이 필요함
- 이러한 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건설이야말로 도시와 농촌, 일반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사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조건으로 국민농업의 목표임

3) 국민농업의 추진전략

□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

- 성장제일주의로부터 탈피하고, 농업인·농업·농촌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실천하며, 농업인과 국민,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 전략이 필요함
- 경쟁력 지상주의와 소수 선별적 규모화·단작화·개별화의 엘리트주의 농정에서 다양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계층의 농가들을 협동화·조직화·복합화·다각화로 이끄는 상생과 순환의 농정으로 혁신해야 함
- 농업만이 아니라 농업·식품·환경·지역·문화복지 등을 포괄하는 통합농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
-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은 무엇보다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곧 농업

인과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의 분권과 자치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식량주권 강화 전략

- 식량안보의 수단은 국내 생산(자급), 비축(재고 보유), 수입 안정화 임. 비축과 수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식량·에너지·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음
- 가장 기본적 수단은 국내 생산, 즉 적정 식량자급률의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임. 자국의 농업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도 공헌하는 길임
- 식량의 안정 공급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을 가능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국내 생산이 국내 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 평가하고, 국가(중앙 각 부처)·지자체·농민·소비자·식품산업 관계자들의 실천과제를 명확히 해야 함
- 정부에서 2006년 국민의 바람직한 식생활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농정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선정한 데 이어 2008년 에그플레이션 발생 등을 계기로 2011년 7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함¹⁰⁾.
- 목표치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으나 목표치 달성 점검체계 구축 및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현실임
- 쌀·우리밀 소비 촉진, 자연순환형 축산 확대 및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윤작 체계 확립), 식용콩과 우리밀 재배 확대, 국산 농산물과 식품산업 간 연계 촉진 등이 필요함

10) 이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모든 곡물의 자급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등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목표는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였음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확충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직불제를 확대하여야 함. 직불제의 확대는 소비자부담형 농정으로부터 재정부담형 농정으로 전환을 방향으로 하되 소요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의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 상호준수의무(cross compliance)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
- 환경 및 경관 보전,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동 다각화, 향토산업 진흥, 도농교류·농촌체험·보건휴양 활성화, 농어촌 복지 기반 확충 등을 추진
- 특히, 농업·지역·환경을 통합¹¹⁾한 정책의 포괄적 실현이 중요함

□ 지역순환형 생명환경농업 체계 구축과 도농 간 생산·유통·소비를 함께 책임지는 먹거리 네트워크 구축

- 농업과 임업과 축산업의 자원순환과 환경친화적 농법 등의 물질순환과, 로컬푸드 운동 등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체계의 구축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린 1·2·3차 산업의 종합 추진을 담은 농업의 복합 산업화(6차산업화)를 통한 경제순환 등 지역순환형 농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시장유통에 좌우되지 않는,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직접 결합하여 생산과 유통, 소비를 함께 책임지는 다양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11) 정영일(2014) p29. 전후 식량부족 상황에서 증사와 생산성 향상을 핵심 목표로 출범했던 EU의 보호주의 농정이념은 197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선별적 규모확대를 추구하는 효율주의 구조농정으로 이행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환경주의·지역주의·다원적 기능성(multi-functionality)주의로 전환되어 왔다. 특히 1999년의 ‘어젠다21’은 농정목표를 농업의 다기능성에 두고 종래 농업생산 중심으로부터 농업·지역·환경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최근 이들 다기능성의 이념을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통합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효율·형평의 조화를 추구하는 농정개혁 과정의 완결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4) 국민농업운동의 조직화

□ 국민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도농간 연대조직체 및 광범위한 네트워크 활동이 필수적임

- 농촌과 도시 각 부문의 여론 주도층을 기본 성원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출발하여 점차 시민 참여형 운동으로 발전
- 변화하는 주위 환경 및 이슈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제를 개발 공론화해나가는 상설 조직으로 발전해야 함
- 농촌과 도시 각 부문·지역의 주요 인사 및 조직 간의 상생협력 사업과 공동행동을 협의하고 인식을 공유해나가며 연대의식과 활동을 촉진시켜가는 연대 조직으로 발전
- 도농생활협동운동, 학교급식운동, 지역먹을거리운동, 지역 에너지운동, 도시농업운동, 식생활교육운동 등 이미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농업 실천활동 조직간의 우선적인 네트워킹이 필요

□ 국민농업활동의 방향

- 첫째, 앞으로 농업·농촌의 문제가 단지 특정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존립방식의 문제이며, 국민의 생활 방식 그 자체와 관련 있는 문제임. 따라서 모든 분야·계층의 사람들에 의한 범국민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둘째, 경제적·농학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짚어보고, 문명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 근본적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함
- 셋째, 범국민적 참여가 가능하고 철학적 근본을 갖춘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이 존재해 나갈 앞으로의 모습과 그 역할 및 가치에 대하여 정립해나가야 함

- 넷째, 21세기 지속가능한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농업·농촌에 요구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적절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역할과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함

3. 국민농업헌장 제정의 의의

□ 국민농업헌장 제정의 의의

- 지금까지 농민헌장 등이 발표되었으나 농업인 또는 국민적 관심을 갖거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함
-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 등을 조망하고 농민의 권리를 선언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계 내부에서 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파급력도 제한적이었음
- 즉,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기 과시 또는 만족에 그치고 말았으며, 사회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 경로를 밟지 못했기 때문임
- 국민농업헌장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제정하고 공포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농업·농촌의 상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과정 자체가 농업계 외부로 열려 있는 것에 의의가 있음
-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노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부문과 농업·농촌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함으로써 농업과 사회 각 분야의 통합적 발전 및 연계성 강화의 계기로 활용
-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하는 국민들의 활동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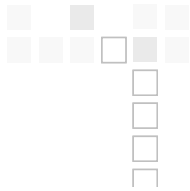
- '농업·농촌·식품'에 대한 가치 및 미래비전을 담은 '국민농업헌

장' 제정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널리 알리는 교과서로 활용되어야 함

- 소비자단체 등 주요 시민단체 임원, 활동가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알려냄으로써, 소비자 국민과 생산자 농업인의 이해관계를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리시키지 않고 국민 전체가 직접 농업·농촌의 이해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자발적인 국민농업운동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회적인 홍보가 아니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꾸준한 범국민 운동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농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 진행 등 필요

- 국민농업포럼에서 기본 연구 및 제정위원회를 거쳐 국민농업헌장을 만들었으나 공식화 및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음
- 농업인의 날을 통해 선포되는 형식을 취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민관협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의결할 경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국민이 공감하는 농정의 추진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농업·농촌의 발전 및 성공적 정책추진을 위해 농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국민농업헌장 제정 취지와 일맥상통함.
-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의 협의 이루 국민에 대한 영향력 및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선포 절차가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가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거나 국회의 청원을 통해 입법부에서 공식화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임



제3부

농업 · 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

□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국외 연구 동향

-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에너지 등 자원 위기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한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농촌 분야는 새로운 대안 체계를 구축하는 중심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¹²⁾
- 환경오염 심화, 이상기후 빈번한 발생 등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농촌사회 유지, 경관보전 등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가치가 더욱 주목 받고 있음
- 유럽에서는 생물다양성·오염정화·어메니티 가치 복원·문화유산·식량안보 등 과거 농업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의 특성을 의미하는 다기능적 농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농사일과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공동 농업정책을 도입하는 과정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 및 단체의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농업·농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전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UN, FAO 등 국제기구에서도 전 세계적 빈곤과 기아 문제의 해소와 함께 환경, 에너지, 물 등 제한적 자원의 활용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농업 및 식량은 주요 연구 과제임.

12) 정영일은 ‘지속가능한 국민의 농업·농촌을 실현하려면’이라는 칼럼에서 2002년 UN WEHAB연구그룹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섯가지 핵심과제를 물·에너지·건강·농업·생물다양성으로 설정하였다. 그중에서 농업은 ① 에너지면에서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②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가축질병 감소를 통해 인류건강과 동물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③ 물절약과 수질오염방지를 통해 수자원의 양과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④ 단작(monoculture)경영 지양과 농촌경관 유지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다른 네가지 과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

- 국제기구에서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임

□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¹³⁾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조사대상을 도시민으로 확대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화된 설문지로 체계화된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고 도시민의 경우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으며 고정항목과 주기(매년, 격년, 3년)별 조사항목을 갖춰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 도시민의 농업·농촌문제에 관심도는 2010년 29.4%, 2011년 39.6%, 2012년 40.5%, 2013년 35.0%로 나타남. 자신과의 관련성 인식은 2010년 40.0%에서 2011년 51.7%로 상승하였다가 2013년 40.5%로 다시 하락하였음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도시민의 의식변화에서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19%p 증가하여 92.2%로 나타났고,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80% 내외의 도시민이 동의하고 있었음
-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8.4%만 찬성하였음. 연령이 많을수록, 블루칼라와 주부층, 학력이 낮을수록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남

13) 강동원 외(2013),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강동원 외(2013), 농업·농촌 국민의식 변화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인정은 50~60%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음. 세금 추가부담 의향은 40~60%의 찬성률을 보임.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함

< 표 3-1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과 세금부담 의향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63.5	58.6	55.9	64.1	61.9	53.9
공익적 기능에 대한 세금부담 의향	40.5	50.4	59.7	52.7	44.9	60.1

자료 : 강동원 외(2013),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촌경제연구원
 강동원 외(2013), 농업·농촌 국민의식 변화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3년 기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조사에서 '식량안보기능'(5점 척도로 4.0),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4.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 유지보전, 정서함양과 휴가 및 여가 제공은 3.8로 비슷하였음
- 도시민 10명 중 5명 정도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개방 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지난 5년간 반대비율도 60.4%(2008년)에서 75.8%(2010년)로 확대.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은 2008년 38.2%에서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34.1%에 그침
- 식품구매 패턴을 가격, 안전성, 품질(맛), 원산지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시 가장 우선 고려하는 항목을 파악. 채소의 경우 2008년 가격에서 2009년 품질(맛), 2010년부터는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곡물과 육류는 원산지를 가장 우선하며 품질(맛)과 안전성에 대한 응답도 높았으며 과일은 품질(맛)을 우선 고려함.
- 정책수요도 안전한 농식품 공급(25% 내외),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16% 내외), 농산물 가격(12% 내외)과 관련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매년 관심도도 증가함

-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90%대의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여 농업인(80% 전후로 꾸준히 상승)보다 높았음
- 농업·농촌의 역할로 현재에는 식량공급, 자연환경보전과 국토균형발전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미래에는 휴식과 관광자원으로서의 농업·농촌 기능 강화를 전망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¹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다원적 가치의 개념과 상통하며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경관유지 등 비생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선행 연구 등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중 식량안보 기능의 중요성이 꾸준히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
- 김용렬 외(2013)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5개 영역, 21개 가치항목을 선정
- 각 영역별 공익적 가치에 대해 가치인식을 7점 척도로 분석하고 특별부담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도 및 지불의사가 가장 높았음
- 농업·농촌의 가치 공유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방안은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으로 마련한다는 의견이 67.9%에 달했으며 직접지불금 방식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대한 찬성율도 61.7%로 높게 나타났음
- 미래 영역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 전망에서도 식량안보(7점 척도 기준 평균 6.03, 100점 환산 점수 86.1)와 환경보전

14) 김용렬 외(2013),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에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취

(5.85/83.6)이 높게 나타났고 경관 및 전통유지(5.28/75.4), 지역사
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5.25/75.0), 국격제고(4.89/69.9)의 순
이였음

<표 3-2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영역 및 항목별 인식도 및 지불의사

영역	가치항목	인식도 (7점/100점)	지불의사(%)
환경보전	1. 수자원함양	5.92 / 84.6	64.1
	2. 수질정화		
	3. 홍수조절		
	4. 대기정화(기후변화 완화)		
	5. 기후순화		
	6. 토양유실 방지		
	7.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8. 농업·농촌 경관	5.36 / 76.6	41.7
	9.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10. 휴양 및 여가공간 제공		
	11. 치유(힐링), 건강기능		
국격제고	12. 국가 매력도 제고	4.91 / 70.1	26.1
	13.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기여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14. 농촌지역의 일자리 제공	5.40 / 77.1	42.0
	15. 농촌경제 유지		
	16. 교육기능		
	17. 지역사회 유지		
	18. 도시문제의 완화		
식량안보	19. 국토관리	6.09 / 87.0	68.5
	20. 식량의 안정적 공급		
	21. 식품의 안전성 보장		

김용렬 외(2013)

2. 농업·농촌의 미래 다원적 가치¹⁵⁾ 및 트렌드 변화

1) 외국의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에 대한 논의

□ 미국,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가

- 미국은 청소년의 비만문제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에 주목
-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보장하는 건강한 삶, 웰빙을 주요한 가치로 강조.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건강한 재료 접근성 확보,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추구
-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 알권리 차원의 표시제도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거대 식품기업은 물론 식품기업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기관 단체와의 마찰이 증가

□ 독일, 지속가능성에 집중

- 독일의 농업정책은 식량안보·안전·품질, 자연과 동물, 문화적 조경, 과학과 기술, 자원의 재생과 순환을 내포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이 정부, 기업,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임
- 환경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가장 우선적인 이슈가 될 것임
- 더 나은 품질의 식량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식량안전에 관한 논쟁으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의 변화가 사회전반에서 일어나면서 농업 분야의 재생 가능 자원의 사용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짐

15) 농림축산식품부(2013). 국민공감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 홍보 현황 자료,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스마트농정분과 회의 자료 참조

□ 영국, 식량안보와 지역발전

- 영국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는 농업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촉진하는 식량안보, 자연환경, 생물 다양성 및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환경보전, 녹색농촌경제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역발전임
- 식량생산 증가 및 환경보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Green Food Project 추진

□ 일본,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 일본의 농업정책에서 소비자의 관심사 반영,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독립심 및 창의성 창출, 환경 보전 등에 관심을 둠
-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안정적 식량공급과 로컬푸드,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이력추적 등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의 식량안보 강조
- 자원절약과 최적화를 통한 온실가스 방출감소 등 환경 보존
- 소득지원 직불제도, 젊은 귀농선택자 대상 보조금 지원, 여성의 농업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유지

□ 스위스, 환경보전과 경관유지

- 스위스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안정된 식량 공급, 자연자원과 환경보전, 분권화된 거주 환경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
-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보전과 경관유지를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직불금을 지급

2) 정부에서 주목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다원적 가치

□ 건강·치유 기능

-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 인간·문화·자연이 공존하는 농촌공간을 도시민의 힐링 장소로 활용하는 웰빙 어메니티

□ 다문화 융합

- 귀농·귀촌자와 다문화 가족이 결합하여 고령화를 완화하고 농촌 공동체의 기반을 유지하여 지역사회 유지·발전에 기여
- 글로컬(global, global과 local의 합성어)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가정이 농촌 지역의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신 문화동맹'의 문화결합

□ 일자리 창출

-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내 향토자원과 자연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따른 100세 시대 일자리 창출

□ 인성함양

- 농촌 체험활동을 통한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
- 자연의 소중함과 본연의 가치에 대한 탐색,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 습득

□ 신성장 동력

-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의 자생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농촌과 도시의 연결을 통한 농촌 수익모델 확립 및 농촌 기업 육성
- 농업분야의 기술 발전을 통한 바이오 경제 시대의 신산업 분야 개발, 경제성장의 기회 확보

□ 심미적 가치

- 오랜 기간 동안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진화돼 온 농촌 경관을 통해 급격한 산업화로 피해를 지는 정서를 달래 주는 목가적 풍경
-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공간 중에서 기능적인 쇠퇴가 나타나는 곳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가치를 부여

3) 메가트렌드의 농업·농촌 파급영향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년)은 메타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를 사회(인구구조의 변화, 양극화, 네트워크 사회), 기술(가상지능, 융복합화, 로봇), 경제(웰빙·감성, 지식기반 경제, 글로벌 인재), 환경(기후변화, 에너지, 기술부작용), 정치(글로벌화, 위험성 증대)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이러한 메가트렌드의 변화는 국내 농업·농촌에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함
- 글로벌화와 수입개방 확대는 농가경제의 악화와 대농과 중소농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와 식생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농업생산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가 부각되면서 환경, 생태, 생물다

양성, 동물복지, 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고령화와 지역 공동화에 따른 도농간 불균형 해소와 복지수요가 증가할 전망

[표 3-3] 농업·농촌 메가트렌드와 파급영향

메가트렌드	전망과 특징	농업·농촌 파급영향
글로벌경제 (무한경쟁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진전, 동북아경제 블록화 · 미국 중심의 세계화 탈피 · 전 지구적 시장경제 출현 · 경제국경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농업구조 조정 · 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 ·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 중시 (녹색산업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 한반도 아열대화 · 화석연료 고갈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 변화, 열대과일 재배 · 농산물생산 감소와 품질저하 ·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확산 ·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전
과학기술발전 (융복합 기술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BEC기술의 보편화, 융합화 ·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 · 원격탐사기술 농업분야 활용 · 기계화·자동화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 기계화·자동화로 정밀농업 발전 · 농산물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 U헬스 등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새로운 가치지향 (문화창조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주의 탈피, 삶의질 중시 · 개성, 집단 지성 · 지식창조 사회 · 여가 및 문화가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 농촌어메니티 활성화 · 농촌관광 산업화 진전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증가
고령화 사회 (장수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인구증가율 둔화 · 평균 수명 연장 · 건강, 장수에 대한 욕구 · 노인복지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 · 농촌사회의 초고령화 ·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 청장년 전업농의 주력 형성

자료) 김정호 외(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설문조사의 설계

□ 조사 개요

- 기간 : 2014년 9월 2일 ~ 9월 17일
- 국민농업헌장 제정위원회 위원, 국민농업포럼 임원 및 자문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전문가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온라인설문조사 실시
- 응답자는 총 88명
- 전문가 설문조사는 국민이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실천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시행
- 적절성 조사는 리커트 5점척도를 적용하여 분석시 일관성과 편이성을 높였고,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와 함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상대평가적 요소를 고려하였음. 부문별 연계성 및 연령대별 실천활동 키워드 조사는 사전 조사를 통해 도출된 예를 제공하고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함

□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주요 항목을 도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헌장 제정 및 실천활동 강화를 중점에 두고 키워드 도출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중 국민농업의 관점에서 강조할 사항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적절성 및 국민농업의 관점에서 중요한 다원적 가치 선택하도록 함
- 국민농업 실현을 위해 부문별로 농업과 연계되는 키워드로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경제부문과 연계되는 키워드

를 선택하도록 함

-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연령층별 실천 활동으로 어린이, 청소년(10대), 청년층(20~30대), 중년층(40대), 장년층(50대), 노년층(60대 이상) 실천 활동을 선택하도록 함

2) 원활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 조사 개요

- 전문가 설문조사에 앞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정형화, 간소화 함
- 사전조사는 2014년 8월 11일 ~ 18일 실시
- 34명의 응답을 수거하여 분석

□ 국민현장에 담을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 국민농업 현장의 구성에 연관되는 5개 요소에 대한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조사
- 적절성 조사 결과 환경, 식량, 에너지 위기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5점척도 4.31), 국민이 함께하며 지탱하는 국민농업의 중요성(4.41),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 국민인식에 부응하는 역할(4.53), 사회 각 부문과 농업·농촌의 연계 방안(4.09), 연령별 국민농업 실천활동과 참여방안(3.97)로 전반적인 적절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우선순위 조사에서는 국민농업의 중요성(1순위 10점, 2순위 9점, ..., 5순위 6점 부여하는 순위 환산 점수 8.7)이 가장 높았고 농업·농촌의 가치(8.3),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8.2) 순이었음
- 국민농업현장에 담을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도출되어 조사의 편의를 위해 질문 문항에서 제외하고 국민농업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전환하여 제공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조사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10개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국민농업의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조사
-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5점 척도 4.47), 안전성 보장(4.47),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4.29)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일기반형성(2.76), 저개발국 지원, 국제적 기아 및 빈곤해소(2.94)는 낮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쉽게 질문에 답할 수 있고 다른 연구와의 비교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가지 문항을 유지

□ 국민농업 운동의 중요성과 적절성 조사

-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15가지 국민농업 운동에 대해 중요성과 적절성을 조사.
- 식생활교육 국민운동(5점 척도 4.50), 먹거리(학교) 급식운동(4.44), 먹거리 안전 및 표시제도 강화운동(4.26), 지역 먹거리 운동(4.21), 슬로푸드, 친환경 등 바른 먹거리 운동(4.18), 도농 생활협동조합운동(4.15), 농업·농촌 체험 및 도농교류 확대 운동(4.03) 등 7가지가 5점 척도 조사에서 4점 이상 획득
- 의료 및 문화활동 지원, 재능기부 운동(3.88),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운동(3.79), 먹거리 소비촉진 운동(3.76),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환경 운동(3.76), 지역에너지 자립 운동(3.71), 도시(생태)농업 운동(3.62) 등 6가지가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
- 농업분야 남북 교류 활성화 등 통일농업 운동(3.21)과 국제 농업지

원활동 및 농촌개발, 기아 및 빈곤 퇴치 운동(3.12)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운동은 적절성을 참조하여 부문과의 연계, 연령별 실천활동의 키워드 도출을 위한 예문으로 사용키로 함

□ 부문별 연계 키워드 조사

- 부문별 연계 키워드는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협동경제 분야에 대해 연계 키워드를 3개씩 적도록 한 후 비슷한 답변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군집화 하였음
-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는 76개로 응답률이 높았고(74.5%) 식생활교육(12), 농촌체험(10), 학교급식(7), 안전먹거리(4)의 순이었음
- 문화 관련 키워드는 66개 응답(응답률 64.7%)이고 도농교류(7), 전통문화(5), 농촌체험(4), 문화기반(3), 전통식품(3), 축제(3)의 순으로 나타남, 답변의 다양성이 크고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환경 관련 키워드는 60개 응답(응답률 58.8%)이고 생태보전(8), 경관보전(5), 친환경(5), 환경보전(4), 에너지(4)의 순으로 나타남
- 의료 관련 키워드는 56개 응답(응답률 54.9%)으로 다소 낮았으나 의료서비스(12), 의료봉사(6), 의료시설(6), 의료생협(5), 의료인력(4) 등에 집중되어 나타남
- 복지 관련 키워드는 51개 응답(응답률 50.0%)로 낮고 노인복지(8), 정주개선(6), 공동생활(4), 일자리(3), 지역복지(3)의 순이었음
- 협동경제 관련 키워드는 46개 응답(응답률 45.1%)로 낮고 꾸러미(5), 지역먹거리(5), 생협(4), 협동조합(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와 복지는 통합하고, 협동경제는 경제부문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 부문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함
-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본 설문지의 예문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재구성함

□ 연령별 실천활동 키워드 조사

- 연령별 연계 키워드는 학생, 청년, 장년(가정에서), 장년(직장에서), 노년층의 실천활동 연계 키워드를 3개씩 적도록 한 후 비슷한 답변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군집화 하였음
- 학생 실천활동과 관련된 키워드는 70개로 응답률이 높았고(68.6%) 농촌체험(17), 텃밭-작물재배(9), 식생활교육(8), 아침밥먹기(7), 바른 식습관(5)의 순이었음
- 청년 실천활동 관련 키워드는 58개 응답(응답률 56.9%)으로 낮고 농촌봉사활동(15), 일자리(6), 재능기부(5), 농촌체험(4)의 순으로 나타남
- 장년(가정에서) 실천활동 관련 키워드는 67개 응답(응답률 65.7%)이고 국내산이용(13), 텃밭(작물재배)(7), 생협(6), 꾸러미(5), 지역먹거리(4)의 순으로 나타남
- 장년(직장에서) 실천활동 관련 키워드는 59개 응답(응답률 57.8%)이고 1사1촌(11), 꾸러미(4), 농촌봉사활동(4), 도농교류(4), 아침밥(4)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노년 실천활동 관련 키워드는 36개 응답(응답률 35.3%)로 매우 낮고 공동식사(3), 전통문화(3), 귀농귀촌(2), 재능기부(2), 전통식품(2), 텃밭(작물재배)의 순이었음
- 학생과 장년(가정에서) 실천활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응답률이 낮아 답변에 애로를 호소. 노년층의 경우 답변률이 매우 낮았으나 제외할 수 없어 문항을 유지
- 장년(직장에서)의 경우 회사의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개인의 자유의지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본 설문에서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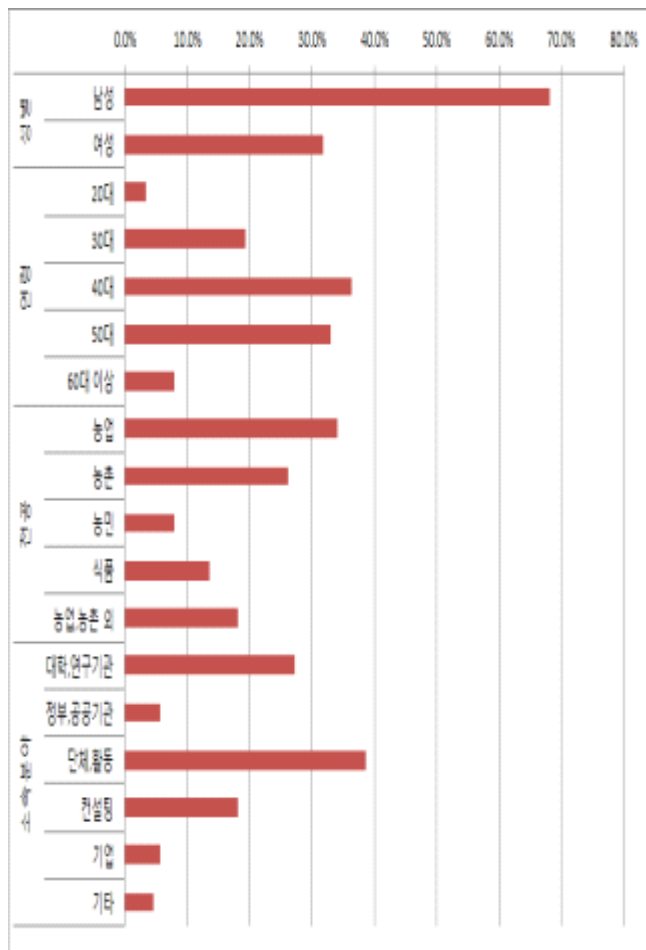
-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재구성하여 본 설문 의 예문으로 사용함

3) 전문가 설문조사 문항별 분석

□ 조사 응답자 기본 정보

- 전체 응답자는 총 88명임.

구분		빈도	비중(%)
합계		88	100.0
성별	남성	60	68.2
	여성	28	31.8
연령	20대	3	3.4
	30대	17	19.3
	40대	32	36.4
	50대	29	33.0
	60대 이상	7	8.0
	전공	농업	30
농촌		23	26.1
농민		7	8.0
식품		12	13.6
농업,농촌 외		16	18.2
소속 분야	대학,연구기관	24	27.3
	정부,공공기관	5	5.7
	단체,활동	34	38.6
	컨설팅	16	18.2
	기업	5	5.7
	기타	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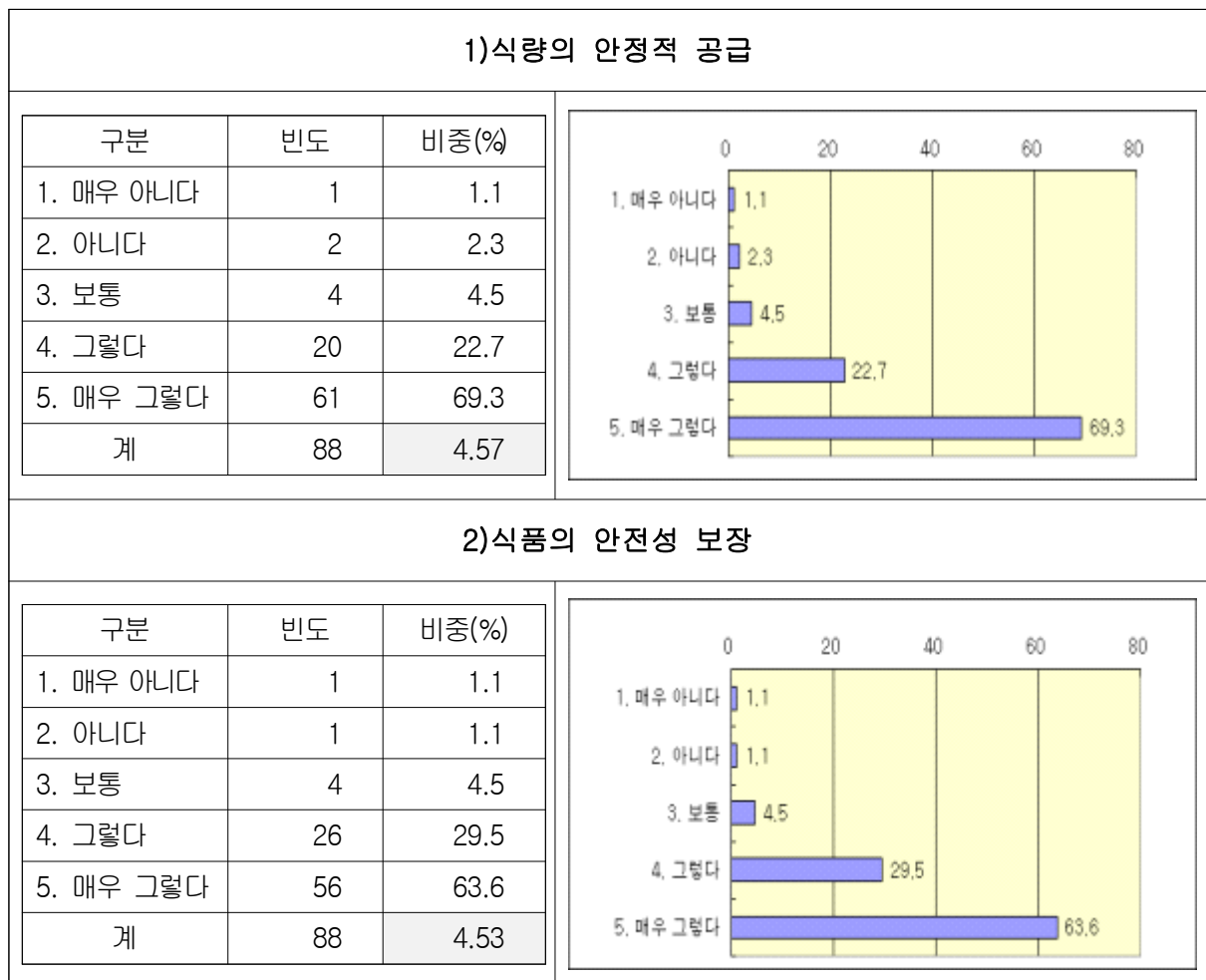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조사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10개 항목으로 조사
- 기존 연구 및 사전조사와 마찬가지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4.57(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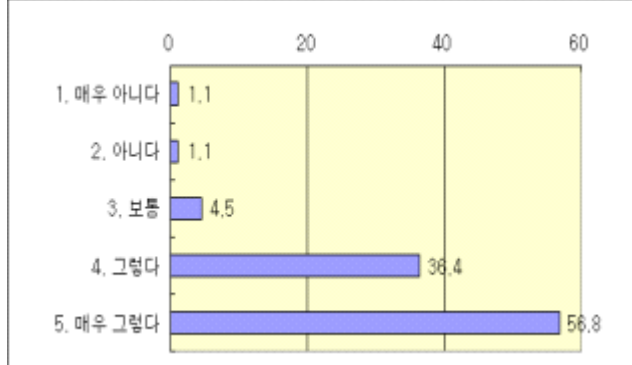
문가조사)/4.47(사전조사)), 안전성 보장(4.53/4.47),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4.47/4.29) 등이 높게 나타났음.

- 농업·농촌 경관 유지·보전(4.11/3.94),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제공(4.03/3.97) 등도 4점을 넘는 높은 점수를 보임
- 여가·체험공간 제공 및 힐링·건강한 삶 기여(3.92/3.53), 지역사회 유지, 도시문제 완화(3.86/3.68), 전통문화보전·계승(3.72/3.38) 등도 높은 수준의 점수를 나타냈음
- 통일기반형성(3.08/2.76), 저개발국 지원, 국제적 기아 및 빈곤해소(3.17/2.94)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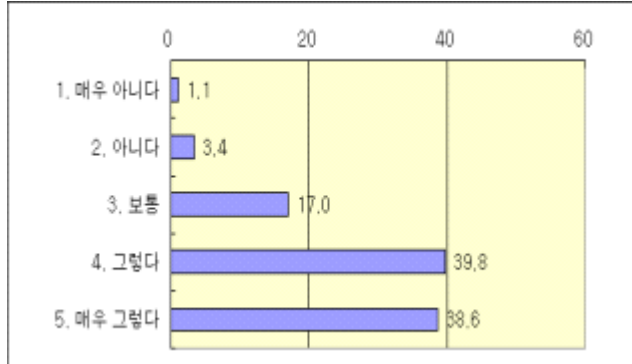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구분	빈도	비중(%)
1. 매우 아니다	1	1.1
2. 아니다	1	1.1
3. 보통	4	4.5
4. 그렇다	32	36.4
5. 매우 그렇다	50	56.8
계	88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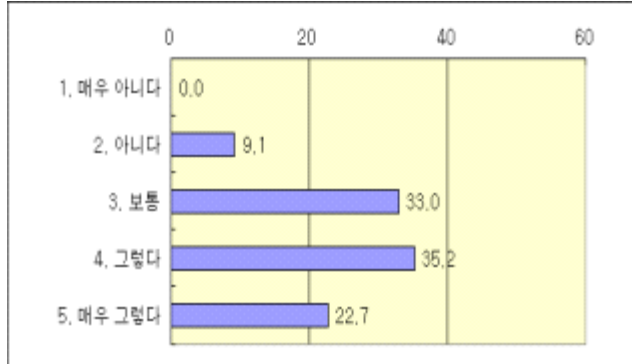
4) 농업·농촌 경관 유지·보전

구분	빈도	비중(%)
1. 매우 아니다	1	1.1
2. 아니다	3	3.4
3. 보통	15	17.0
4. 그렇다	35	39.8
5. 매우 그렇다	34	38.6
계	88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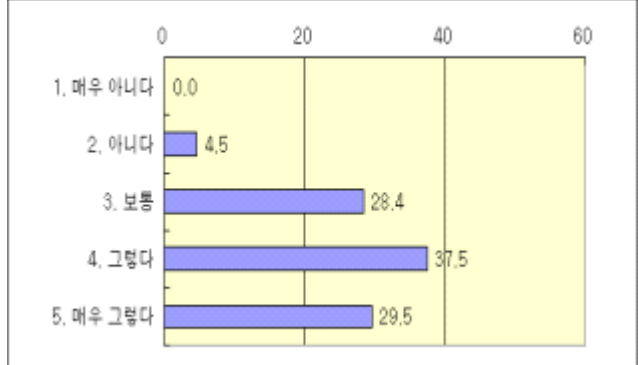
5) 전통문화보전·계승

구분	빈도	비중(%)
1. 매우 아니다	0	0.0
2. 아니다	8	9.1
3. 보통	29	33.0
4. 그렇다	31	35.2
5. 매우 그렇다	20	22.7
계	88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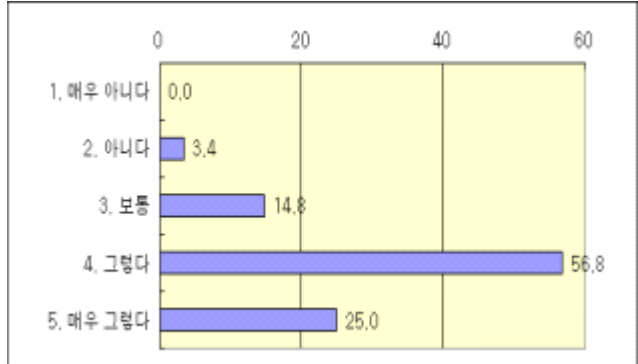
6)여가·체험공간 제공, 힐링·건강한삶 기여

구분	빈도	비중(%)
1. 매우 아니다	0	0.0
2. 아니다	4	4.5
3. 보통	25	28.4
4. 그렇다	33	37.5
5. 매우 그렇다	26	29.5
계	88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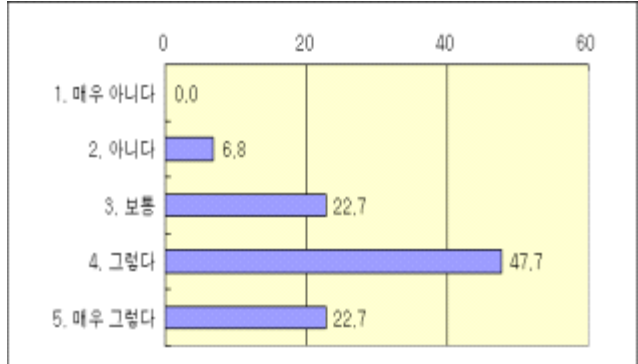
7)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제공

구분	빈도	비중(%)
1. 매우 아니다	0	0.0
2. 아니다	3	3.4
3. 보통	13	14.8
4. 그렇다	50	56.8
5. 매우 그렇다	22	25.0
계	88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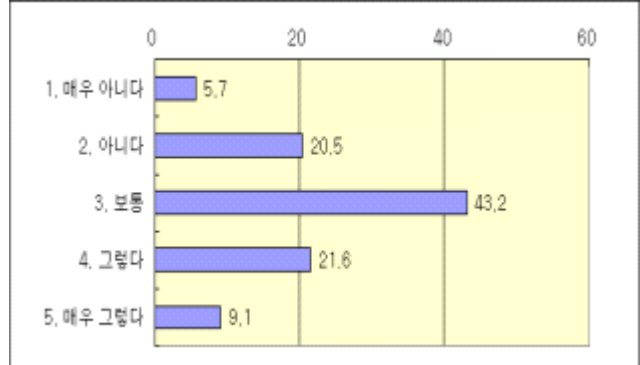
8)지역사회유지,도시문제완화

구분	빈도	비중(%)
1. 매우 아니다	0	0.0
2. 아니다	6	6.8
3. 보통	20	22.7
4. 그렇다	42	47.7
5. 매우 그렇다	20	22.7
계	88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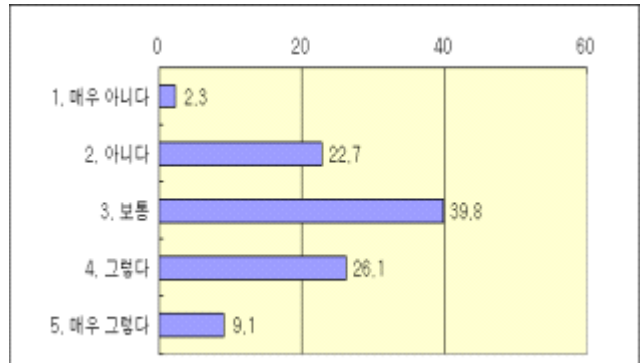
9) 통일촉진, 통일기반형성

구분	빈도	비중(%)
1. 매우 아니다	5	5.7
2. 아니다	18	20.5
3. 보통	38	43.2
4. 그렇다	19	21.6
5. 매우 그렇다	8	9.1
계	88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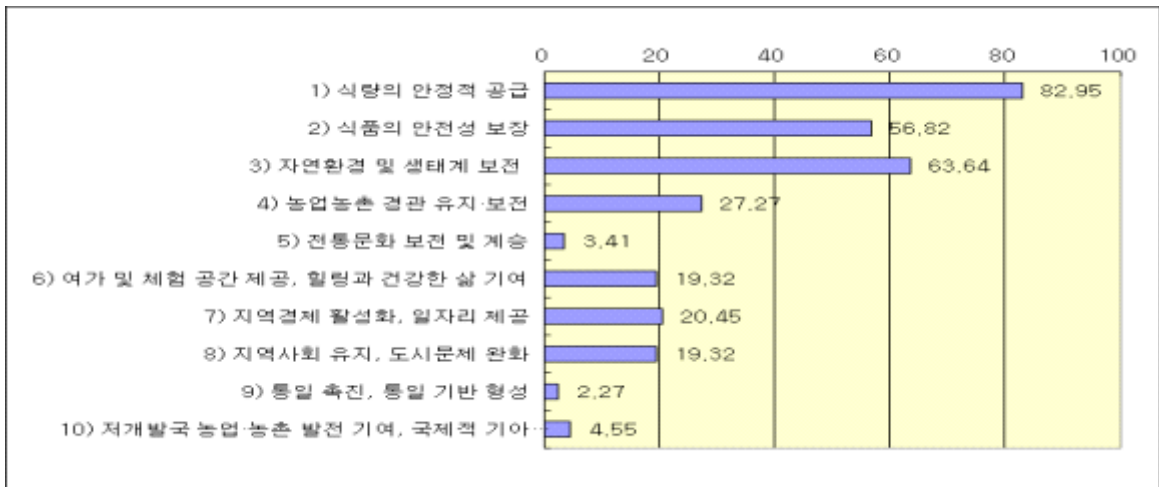
10) 저개발국 농업발전기여, 기아·빈곤해소

구분	빈도	비중(%)
1. 매우 아니다	2	2.3
2. 아니다	20	22.7
3. 보통	35	39.8
4. 그렇다	23	26.1
5. 매우 그렇다	8	9.1
계	88	3.17



- 농업·농촌의 역할과 다원적 가치 중 국민이 함께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에서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식품의 안전성 보장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식품의 안전성 보장이 절대적 가치를 물을 때와 순서만 바뀌어서 나타난 것임
- 이어서 농업·농촌 경관 유지·보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제공, 여가·체험공간 제공 및 힐링·건강한 삶 기여, 지역사회유지-도시문제 완화는 비슷한 점수를 나타냄

구 분	빈도	점수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73	83.0
2) 식품의 안전성 보장	50	56.8
3)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56	63.6
4) 농업농촌 경관 유지·보전	24	27.3
5)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3	3.4
6) 여가 및 체험 공간 제공, 힐링과 건강한 삶 기여	17	19.3
7)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제공	18	20.5
8) 지역사회 유지, 도시문제 완화	17	19.3
9) 통일 촉진, 통일 기반 형성	2	2.3
10)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 기여, 국제적 기아 및 빈곤 해소	4	4.6



□ 부문별 연계 키워드 조사

- 부문별 연계 키워드는 8개 분야 26개 실천활동에 대한 예문을 제시하고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경제 분야에 대해 연계 키워드를 2개씩 적도록 하였음. 온라인조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무응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함
- 각 항목별로 빈도수/n(=88)*100의 산식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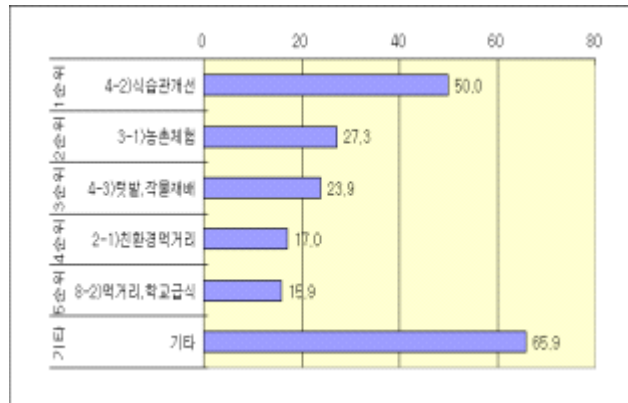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농업 운동 및 실천활동 (예문)		
국내산 농산물	1-1)소비촉진	1-2)인증표시제
바른 먹거리	2-1)친환경먹거리	2-2)지역먹거리 2-3)슬로푸드
도농 교류	3-1)농촌체험	3-2)농촌봉사 3-3)도농결연
식생활교육	4-1)아침밥	4-2)식습관개선 4-3)텃밭, 작물재배
생태·환경	5-1)생물다양성	5-2)생태보전 5-3)경관유지
전통보전	6-1)전통문화	6-2)전통식품
삶의질	7-1)환경 및 기반구축	7-2)접근성 제고 및 격차해소 7-3)복지전달체계 7-4)재능기부
기타	8-1)생활협동조합	8-2)먹거리·학교 급식 8-3)도시농업 8-4)에너지절감, 자립 8-5)통일농업 8-6)국제교류 및 지원

-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는 식습관개선(50.0), 농촌체험(27.3), 텃밭-작물재배(23.9) 등으로 사전조사와도 일치. 교육분야의 키워드는 식생활교육(식습관개선, 텃밭-작물재배)과 농촌체험으로 정함
 - * 사전조사에서는 생활교육(12), 농촌체험(10), 학교급식(7), 안전먹거리(4)의 순이었음
- 문화관광 관련 키워드는 전통문화(51.1), 농촌체험(46.6), 전통식품(19.3) 등임. 문화관광부문의 연계 키워드는 전통보전(전통문화, 전통식품)과 도농교류(농촌체험)로 정함
 - * 사전조사에서는 도농교류(7), 전통문화(5), 농촌체험(4), 문화기반(3), 전통식품(3), 축제(3)의 순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는 복지전달체계(37.5), 환경 및 기반구축(34.1), 친환경먹거리(22.7) 등임. 보건복지부문의 연계키워드는 삶의질향상(복지전달체계, 환경 및 기반구축, 전달체계)과 친환경먹거리(푸드스텝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됨) 제공으로 정함

* 사전조사에서 의료 관련 키워드는 의료서비스(12), 의료봉사(6), 의료시설(6), 의료생협(5), 의료인력(4), 복지 관련 키워드는 노인복지(8), 정주개선(6), 공동생활(4), 일자리(3), 지역복지(3)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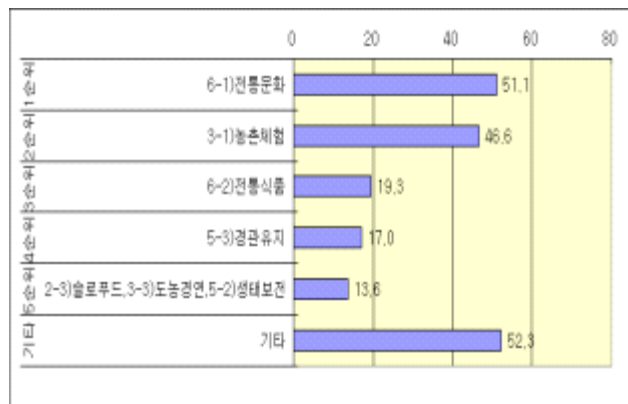
2-1. 교육부문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4-2)식습관개선	44	50.0
2순위 3-1)농촌체험	24	27.3
3순위 4-3)텃밭, 작물재배	21	23.9
4순위 2-1)친환경먹거리	15	17.0
5순위 8-2)먹거리, 학교급식	14	15.9
기타 기타	58	65.9
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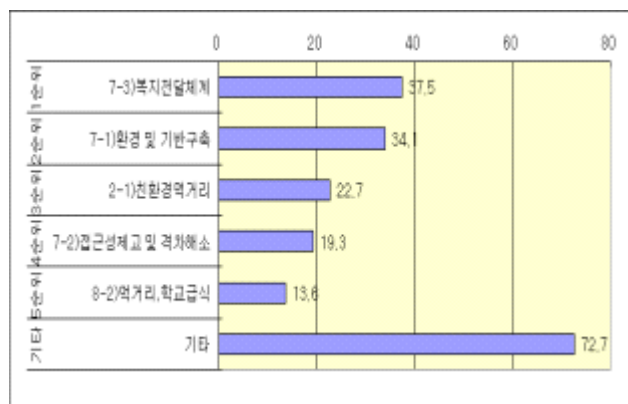
2-2. 문화관광부문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6-1)전통문화	45	51.1
2순위 3-1)농촌체험	41	46.6
3순위 6-2)전통식품	17	19.3
4순위 5-3)경관유지	15	17.0
5순위 2-3)슬로푸드, 3-3)도농경연, 5-2)생태보전	12	13.6
기타 기타	46	52.3
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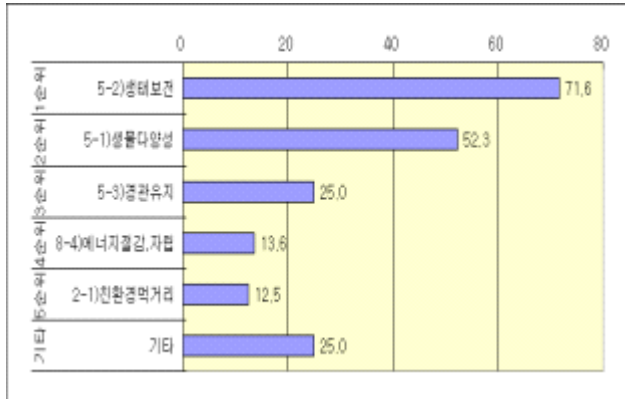
2-3. 보건복지부문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7-3)복지전달체계	33	37.5
2순위 7-1)환경 및 기반구축	30	34.1
3순위 2-1)친환경먹거리	20	22.7
4순위 7-2)접근성제고 및 격차 해소	17	19.3
5순위 8-2)먹거리, 학교급식	12	13.6
기타 기타	64	72.7
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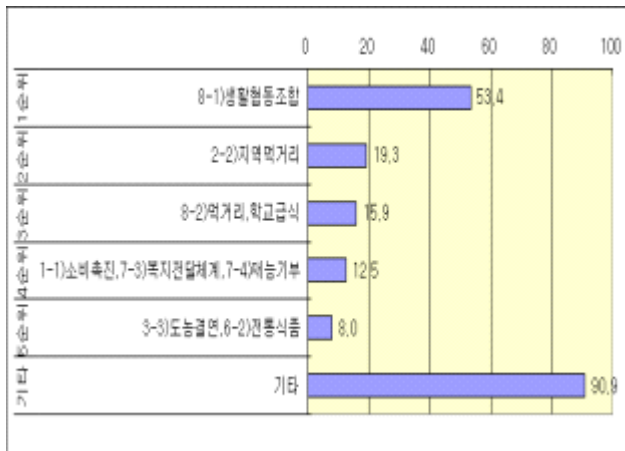
2-4. 환경부문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5-2)생태보전	63	71.6
2순위 5-1)생물다양성	46	52.3
3순위 5-3)경관유지	22	25.0
4순위 8-4)에너지절감,자립	12	13.6
5순위 2-1)친환경먹거리	11	12.5
기타 기타	22	25.0
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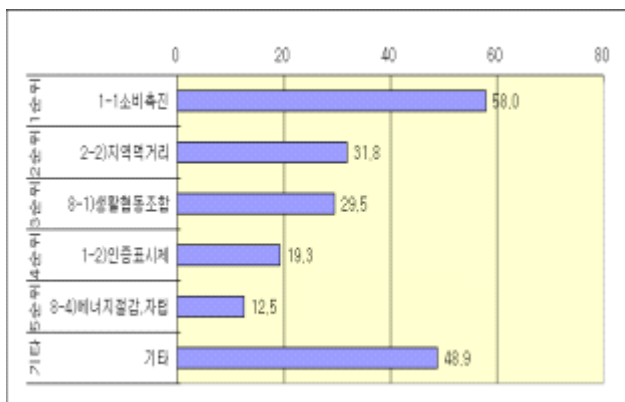
2-5. 고용노동부문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8-1)생활협동조합	47	53.4
2순위 2-2)지역먹거리	17	19.3
3순위 8-2)먹거리, 학교급식	14	15.9
4순위 1-1)소비촉진, 7-3)복지전달체계, 7-4)재능기부	11	12.5
5순위 3-3)도농결연, 6-2)전통식품	7	8.0
기타 기타	80	90.9
계	176	



2-6. 경제부문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1-1)소비촉진	51	58.0
2순위 2-2)지역먹거리	28	31.8
3순위 8-1)생활협동조합	26	29.5
4순위 1-2)인증표시제	17	19.3
5순위 8-4)에너지절감,자립	11	12.5
기타 기타	43	48.9
계	176	



- 환경 관련 키워드는 생태보전(71.6), 생물다양성(52.3), 경관유지(25.0) 등임. 환경분야 연계 키워드는 생태·환경보전(생태보전, 생물다양성, 경관유지임)으로 정함
- * 사전조사에서는 생태보전(8), 경관보전(5), 친환경(5), 환경보전(4), 에너지(4)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 관련 키워드는 생활협동조합(53.4), 지역먹거리(19.3)임. 다양한 분야의 응답이 넓게 분포되어 나타남. 고용노동부 관련 키워드는 생활협동조합,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유지)으로 정함
- * 고용노동분야는 사전조사가 실시되지 않음
- 경제 관련 키워드는 소비촉진(58.0), 지역먹거리(31.8), 생활협동조합(29.5), 인증표시제(19.3)임. 경제분야 키워드는 국내산농산물(소비촉진, 인증표시제), 지역먹거리, 생활협동조합으로 정함
- * 사전조사에서는 꾸러미(5), 지역먹거리(5), 생협(4), 협동조합(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부문별 농업과 연계 키워드 (정리)	
교육부문	식생활교육(식습관개선, 텃밭-작물재배)과 농촌체험
문화관광부문	전통보전(전통문화, 전통식품)과 도농교류(농촌체험)
보건복지부문	삶의질향상(복지전달체계, 환경 및 기반구축, 전달체계)와 친환경먹거리
환경부문	생태·환경보전(생태보전, 생물다양성, 경관유지)
고용노동부문	생활협동조합,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유지)
경제부문	국내산농산물(소비촉진, 인증표시제), 지역먹거리, 생활협동조합

□ 연령별 실천활동 키워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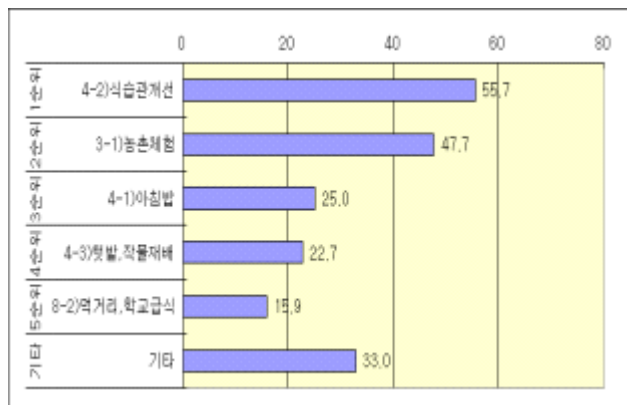
- 연령별 연계 키워드는 8개 분야 26개 실천활동에 대한 예문을 제시하고, 어린이, 청소년(10대), 청년층(2~30대), 중년층(40대), 장년

층(50대), 노년층(60대이상)의 실천활동 연계 키워드를 2개씩 적도록 하였음. 온라인조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무응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함

- 부문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별로 빈도수/n(=88)*100의 산식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였음
- 어린이, 청소년(10대) 실천활동과 관련된 키워드는 식습관개선(55.7), 농촌체험(47.7), 아침밥먹기(25.0), 텃밭-작물재배(22.7)임. 어린이, 청소년의 실천활동 키워드는 식습관개선, 아침밥먹기, 텃밭-작물재배와 농촌체험으로 정함
 - * 사전조사에서는 농촌체험(17), 텃밭-작물재배(9), 식생활교육(8), 아침밥먹기(7), 바른식습관(5)의 순이었음
- 청년층(2~30대) 실천활동 관련 키워드는 농촌봉사활동(45.5), 아침밥먹기(27.3), 농촌체험(23.9)임. 청년층(2~30대) 실천활동 키워드는 농촌봉사활동, 농촌체험과 아침밥먹기로 정함
 - * 사전조사에서는 농촌봉사활동(15), 일자리(6), 재능기부(5), 농촌체험(4)의 순으로 나타남
- 중년층(40대) 실천활동 관련 키워드는 소비촉진(38.6), 지역먹거리(27.3), 도농결연(26.1), 생활협동조합(20.5)로 나타남
- 장년층(50대) 실천활동 관련 키워드는 도농결연(34.1), 소비촉진(29.5), 지역먹거리(22.7), 텃밭(작물재배)(19.3)로 나타남
 - * 장년층 사전조사에서는 가정에서 국내산이용(13), 텃밭(작물재배)(7), 생협(6), 꾸러미(5), 지역먹거리(4), 직장에서 1사1촌(11), 꾸러미(4), 농촌봉사활동(4), 도농교류(4), 아침밥(4) 등으로 나타남
- 중년층과 장년층의 사회적 역할에서 큰 차이가 없고 조사결과도 대동소이하므로 중장년층(4~50대)으로 통합. 중장년층(4~50대) 실천활동 키워드는 국내농산물 소비촉진, 도농결연, 지역먹거리, 텃밭(작물재배)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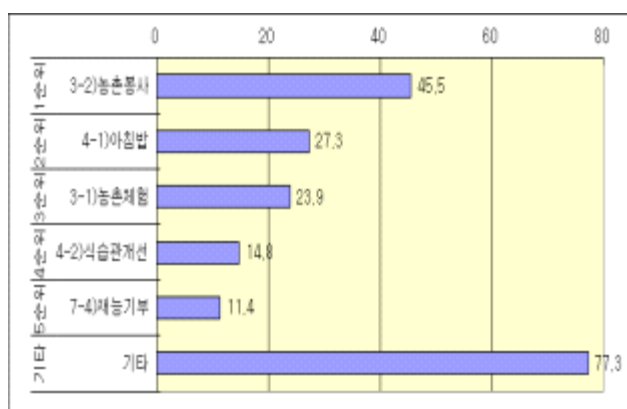
3-1. 어린이, 청소년(10대)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4-2)식습관개선	49	55.7
2순위 3-1)농촌체험	42	47.7
3순위 4-1)아침밥	22	25.0
4순위 4-3)텃밭, 작물재배	20	22.7
5순위 8-2)먹거리, 학교급식	14	15.9
기타 기타	29	33.0
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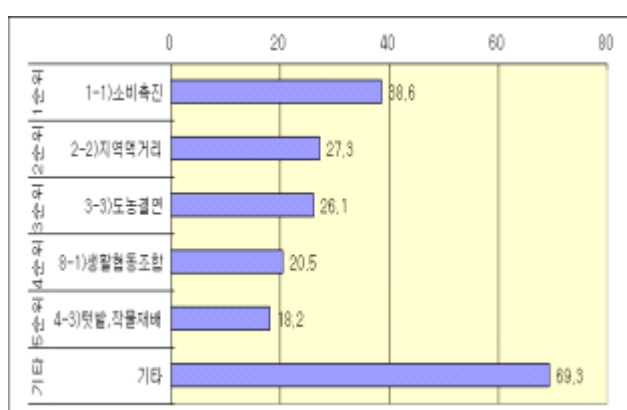
3-2. 청년층(20~30대)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3-2)농촌봉사	40	45.5
2순위 4-1)아침밥	24	27.3
3순위 3-1)농촌체험	21	23.9
4순위 4-2)식습관개선	13	14.8
5순위 7-4)재능기부	10	11.4
기타 기타	68	77.3
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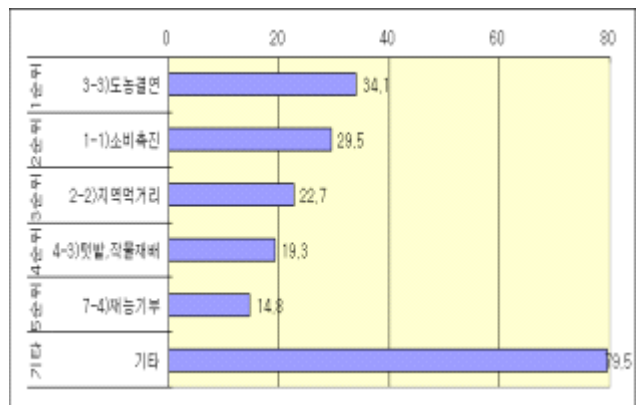
3-3. 중년층(40대)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1-1)소비촉진	34	38.6
2순위 2-2)지역먹거리	24	27.3
3순위 3-3)도농결연	23	26.1
4순위 8-1)생활협동조합	18	20.5
5순위 4-3)텃밭, 작물재배	16	18.2
기타 기타	61	69.3
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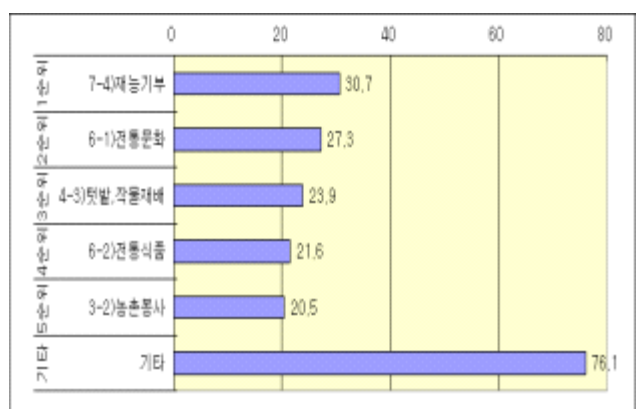
3-4. 장년층(50대)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3-3)도농결연	30	34.1
2순위 1-1)소비촉진	26	29.5
3순위 2-2)지역먹거리	20	22.7
4순위 4-3)텃밭, 작물재배	17	19.3
5순위 7-4)재능기부	13	14.8
기타 기타	70	79.5
계	176	



3-5. 노년층(6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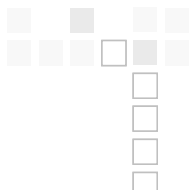
구분	빈도	점수
1순위 7-4)재능기부	27	30.7
2순위 6-1)전통문화	24	27.3
3순위 4-3)텃밭, 작물재배	21	23.9
4순위 6-2)전통식품	19	21.6
5순위 3-2)농촌봉사	18	20.5
기타 기타	67	76.1
계	176	



- 노년층(60대 이상) 실천활동 관련 키워드는 재능기부(30.7), 전통문화(27.3), 텃밭(작물재배)(23.9), 전통식품(21.6), 농촌봉사(20.5)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노년층 실천활동 키워드는 재능기부, 전통유지(문화, 식품), 텃밭(작물재배)으로 정함

* 사전조사에서는 공동식사(3), 전통문화(3), 귀농귀촌(2), 재능기부(2), 전통식품(2), 텃밭(작물재배)의 순이었음

연령별 농업과 연계 키워드 (정리)	
어린이, 청소년(10대)	식습관개선, 아침밥먹기, 텃밭-작물재배와 농촌체험
청년(2~30대)	농촌봉사활동, 농촌체험과 아침밥먹기
중장년(4~50대)	국내농산물 소비촉진, 도농결연, 지역먹거리, 텃밭(작물재배)
노년층(60대이상)	재능기부, 전통유지(문화, 식품), 텃밭(작물재배)



제4부

국민농업연장의 제정

1.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공무원윤리헌장

□ 공무원윤리헌장은 국가법령의 형태를 띤 현행 규칙¹⁶⁾임

- 공무원 윤리헌장은 1980년 12월 29일 대통령훈령 제44호로 선포
- 이전의 '공무원의 신조'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 등을 주요 덕목으로 채택

□ 공무원윤리헌장의 구성

- 전문과 5개항의 지표, 공무원의 신조(5개 덕목)로 구성
- 전문은 공무원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서술
- 지표는 공무원의 사명을 5개항으로 정리하여 서술
- 신조는 국가, 국민, 직무, 직장, 생활로 나누어 덕목을 제시함
- 또한 공무원윤리헌장의 공무원의 신조에 연계하여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을 제정. 5개 덕목의 신조마다 6개씩 (국가의 경우 ①국가안보, ②민주복지, ③주체의식, ④문화창달, ⑤국토보전, ⑥국어사랑) 총 30개의 실천지침을 제시

□ 국민농업헌장을 제정함에 있어 구성과 형식면에서 참조

- 국민농업헌장 구성의 형식적인 면에서 벤치마킹하여 전문과 부문별 연계, 실천 활동으로 구분하여 정리
- 특히, 실천 활동은 헌장에는 간략하면서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추진

16) 각 행정기관의 서비스헌장을 제외하면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는 유일한 헌장의 형태임

공무원 윤리 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공무원 윤리 헌장 실천강령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애국선열의 위국충정을 귀감으로 삼고 신명을 바쳐 국가 안보에 앞장선다. (국가안보)
2. 새역사 창조의 기수로서 민주복지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민주복지)
3. 확고한 민족주체의식을 가지고 사대주의 사상을 단호히 물리친다.(주체의식)
4. 조상이 물려준 전통문화를 드높이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문화창달)
5. 우리민족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한다. (국토보전)
6.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사랑하고 같고 닦아 나간다. (국어사랑)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공정한 업무처리)
2. 모든 업무는 나와 관청의 편의보다는 국민편의 위주로 처리한다. (국민편의 행정)
3.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거부한다. (부당한 특혜 배격)
4.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나 지속성 없는 졸속행정의 폐습을 지양한다. (내실행정 추구)
5. 공개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한다. (공개행정 구현)
6. 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손님처럼 친절과 예절을 다한다. (친절 봉사행정)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전문지식과 기술을 부단히 연마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 (창의적 직무수행)
2. 모든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고 지체 없이 처리하며, 그릇된 제도나 정책은 과감히 시정한다. (발전지향적 자세)
3. 맡은바 직무는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처리한다. (소신있는 업무처리)
4. 업무처리는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책임행정)

5. 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여 전체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적극 기여한다. (업무협조)
6. 근무시간중에는 직무에만 전념하고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직무전념)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내직장을 내집같이 여겨 명랑하고 화목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명랑한 분위기)
2.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되, 부당한 지시는 소신껏 건의하여 바로 잡도록 노력한다. (상사에 대한 태도)
3.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여 올바른 건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한일은 칭찬으로 격려한다. (부하에 대한 태도)
4.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이해와 겸손으로 동료간의 융화를 도모한다. (동료에 대한 태도)
5. 언행의 일치와 약속의 이행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신뢰풍토)
6. 직장내의 파벌조성을 삼가며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아니한다. (파벌의식 타파)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1. 조상이 남긴 청백리정신을 계승하여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앞장선다. (청렴정신)
2. 직권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끌리는 정실을 물리친다. (이권불개입)
3. 허례허식을 삼가고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 (근검절약)
4.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공중도덕을 준수하여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준법정신)
5. 화목한 가정생활과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정생활)
6. 이웃과는 항상 웃으며 인사하고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을 숭선 실천한다. (이웃생활)

2) 농민헌장

- 농민헌장은 1993년 제1회 농민의날 행사 개최를 기념하여 채택
 - 농민헌장의 필요성 및 제정 추진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감. 1963년 농지회에서 농민헌장발기 취지문을 발표. 이는 농어민의 날이 1964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일부 단체에서 행사를 해 오고 있는 것과 일맥 상통함.
 - 1988년부터 농민의 날 대상일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1990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농민의 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 1991년 12월 농민의 날 선포식을 거행하여 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의 공식기념일로 지정¹⁷⁾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우여곡절을 겪음
 - 1993년 11월 11일 제1회 농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하며,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사명을 담은 농민헌장을 발표
- 국토자원 및 환경보전은 물론 복지국가 건설, 인류평화에 이바지 하는 등 폭넓은 관점에서 농민의 사명을 밝힌 점을 벤치마킹
 - 국가 근본산업으로서 농업과 이를 영위하는 농민의 사명감과 긍지, 국가와 농업인의 역할을 기재한 내용을 승계하여 오늘날의 현실에 맞추어 적용
 - 농민의 인격권과 농촌의 환경권 그리고 농업의 산업권을 국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농민의 사명을 농업, 전통과 정신의 계승으로 풀어내고, 국토 자원 및 환경보전, 복지국가 건설, 국익과 인류평화 공헌으로 승화하고자 하였음

17) 농민의 날 추진위원회는 이후 1994년 활동을 재개하여 1995년 12월 총무처에 농업인의날 제정을 요청하고 1996년 5월 총무처는 농업인의날을 11월 11일로 제정 공포하게 된다.

농민헌장

농업은 이나라 건국 이래 한결같은 근본산업이었으며, 이를 지켜 가꾸어온 농민은 민족 자존의 바탕이었다. 과학문명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달할지라도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와 농민에게 주어진 사명과 금지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농민은 역사적 사명을 깨달아 즐기치게 농민의 정신혁신, 농업의 기술혁신, 농촌의 생활혁신으로 복지농촌건설에 앞장서서, 이나라 농업의 크나큰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며, 국가는 농민의 인격권과 농촌의 환경권 그리고 농업의 산업권을 항상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조국강토를 거래와 인류의 영원한 삶의 젖줄로 삼아 행복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고자, 이에 지켜야 할 농민헌장을 제정한다.

1. 우리 농민은 농업이 영원한 인류의 기본산업임을 믿고, 나라의 번영과 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농업의 깊은 뿌리가 되고자 힘쓴다.
1. 우리 농민은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지키고 농심의 바탕위에서 선조들이 이룩한 성실과 근면의 정신풍토를 이어 간다.
1. 우리 농민은 국토의 자원과 환경을 잘 보존하여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강산을 가꾸기에 앞장선다.
1. 우리 농민은 농심을 천심으로 믿고 힘을 모아 창의의 슬기를 키워서 복지국가, 복지세계 건설에 이바지한다.
1. 우리 농민은 협동단결로 스스로의 생활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가 국익과 인류평화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인다.

1993년 11월 11일

농민의 날 행사 참가단체 및 기관, 농민일동

3) 세계농민헌장

- 세계농민헌장은 2006년 5월, IFAP¹⁸⁾ 서울총회 폐막식에서 발표
 - IFAP(세계농업인연맹) 서울총회 폐막식에서 한국 농협이 제안한 '세계농민헌장'을 83개국 118개 농업인단체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발표함
 - 농민의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도록 모든 국가와 단체·국제기구 등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본원리와 10개항의 규범으로 구성
 - WTO 체계 출범 이후 시장개방의 여파로 생존문제에 직면한 가축농의 보호와 육성 의무를 천명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함
 - 농협중앙회는 세계농민헌장 기초(안)에 대해 농민단체는 물론 학계, 언론계 등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을 주도
 - 또한, 세계농민헌장 발표 이후 이를 UN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실효성 있는 국제규범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내외 농업계의 공동 노력을 호소하는 등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었음
- 다자간 국제 협상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활용방안 벤치마킹
 - 세계농민헌장은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간결하고 선언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함
 - WTO 무역협상이 강한 힘을 가지고 전개되던 시기에 개발도상국들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 헌장 제정 이후 추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실효성이 있는 국제규범화를 추진하여 농민단체의 활동력을 배가한 점을 벤치마킹

18) IFAP는 세계 6억명의 농업인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농업계 NGO(비정부기구)이며 UN(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및 FAO(식량농업기구)의 자문기구

세계농민헌장

농업은 모든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막중한 존재임을 확인한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농민들이 정당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도시민들이 얻는 문화혜택을 농민도 공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사명이 중차대함을 확인한다. 이에 농민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사회를 향한 약속을 주창하는 기본원리와 규범 10개항을 선포한다.

우리 전 세계 농민은 위와 같은 농민의 권리와 의무가 전 세계에서 인정되도록, 모든 국가와 단체·국제기구 및 관련 당사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함을 주창한다.

-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막중한 역할을 인정한다.
- 농민조직을 필수 불가결한 동반자로 참여시키고 존중한다.
- 농민이 정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농촌과 도시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정당한 대접을 한다.
- 농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 기아와 영양실조·농촌 빈곤을 퇴치한다.
- 공정하고 공평한 농산물 무역협상을 확립한다.
- 농산물 유통체계에서 힘의 균형을 통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활성화되도록 보장돼야 한다.
- 여성농민과 청년농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격려가 있어야 한다.
-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기준·생산이력제 등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한다.

4) 밴쿠버 식량현장

- 식량정의, 식량안보, 지속가능성을 축으로 한 밴쿠버 식량전략 체계의 비전과 원칙에 해당
 - 2007년 2월, 밴쿠버 시의회는 밴쿠버식량정책협의회가 제안한 '밴쿠버 식량 현장'을 채택
 - 이후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으로 로컬푸드 생산력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제공을 핵심목표로 하는 밴쿠버 식량전략(Vancouver Food Strategy) 수립(2010년, 2013년)
 - 밴쿠버 식량전략은 식량현장의 비전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5가지의 목표와 행동을 명시하고 있음
- 밴쿠버 식량전략의 5가지 목표와 우선 행동 분야
 - 5가지 목표는 먹거리 친화마을 지원, 주민들이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게 권한 부여, 건강하고 값싸고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증대, 먹거리를 밴쿠버 녹색경제의 중심에 두기, 파트너 및 모든 단계의 정부와 함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지지
 - 우선 행동분야는 도시농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내 먹거리 생산, 가공·저장·유통 과정의 격차 해소 및 밴쿠버시가 구매하는 로컬푸드 비율을 증대하는 먹거리 가공 및 유통, 값싼 로컬푸드를 파는 소매점에서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 음식물쓰레기 처리 프로그램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관리
- 밴쿠버의 사례는 식량현장이 지역 또는 국가단위의 먹거리종합계획과 연계되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임
 - 국민농업현장 또한 먹거리종합계획 등의 비전이자 방향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양한 실천계획으로 확대될 수 있음

밴쿠버 식량헌장 (VANCOUVER FOOD CHARTER)

밴쿠버식량헌장은 공동체와 환경을 이롭게하는 먹거리시스템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 헌장은 지자체 차원의 공동 식품정책 발전에 기여하며, 밴쿠버 지역의 식량안보와 관련한 여러 논의와 행동들에 지역공동체가 활발히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비전

밴쿠버시는 다음과 같이 정당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가 사는 지역의 경제적, 생태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을 위해 기여한다.
- 지역단위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며 자연 및 인적자원을 보호하는 정부 및 민간 식품사업을 장려한다.
- 밴쿠버시의 모든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충분하면서도 각 문화를 존중하는, 그리고 영양있는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관을 비롯한 먹거리시스템에 속한 모든 부문간의 논의들을 반영한다.
- 밴쿠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기린다.

전문(前文)

식량안보가 보장된 공동체에서는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식량의 재배, 가공, 공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정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하며, 지역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 특히 어린이 중에는 안전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더욱이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은 재배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소비된 것들이며, 생산되고 가공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화석연료에 의존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더 많이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자연재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량부족의 대응에 취약하게 만든다. 즉, 전체 식량안보는 점차 세계적 차원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갖고있는 먹거리시스템 목표를 달성하는 공동체 차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차원의 식량안보는 지역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시민, 소비자, 기업, 정부)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지역 주민들이 식량안보를 둘러싼 담론이나 행동에 동참할 때, 정부 기관들은 이들의 요구에 반응하게 되며, 지역사회와 먹거리시스템의 모든 부문들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는 건강한 식품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2002년, 밴쿠버시는 “지속가능성”을 모든 집행의 근본적인 접근방식으로 채택하였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밴쿠버”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원칙

밴쿠버의 먹거리시스템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른다.

지역경제개발

지역에 기반한 먹거리시스템은 밴쿠버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로컬푸드시스템에 더 의존할수록 우리 지역경제는 향상되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식량안보가 증대된다.

건강한 생태환경

먹거리에 관한 전체 시스템은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안전에 기여하고, 지역 및 세계 공동체의 웰빙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사회 정의

식량은 인류의 기본권리이다. 모든 주민들은 충분한 양의,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존중된 식량을 필요로 한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인 성장과 학습에 필요한 충분하고 영양있는 식량을 필요로 한다.

협동과 참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은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구성원들의 책임을 요구한다. 지역차원의 식량안보는 건강한 먹거리시스템 관련 정책 및 실행을 위해 지방정부, 활동그룹, 기업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정부기관들이 협력할 때 발전한다.

다양성의 공존(기념하기)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인류의 근본적 전통이다. 음식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축하의 자리로 모이게 한다.

정당하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밴쿠버 시민인 우리는 :

- 지자체 및 지역단위의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리더가 된다.
- 지역의 농부와 식품 생산자를 지원한다
- 도시 농업과 식량 복원 기회를 확대한다
- 건강한 토양을 조성하고 보호하는데 힘쓴다
- 인류의 식량생산을 위해 길러지는 가축들에게 인도적인 처우를 보장한다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지를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 건강하고 충분한 양의 식품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밴쿠버시의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을 증대시킨다
- 식품에 대해 서로 의논하며 가르침을 준다
- 밴쿠버시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기린다

5) 독일, 농업과 소비자 현장

□ 농업과 환경, 소비자에 대한 각종 논쟁을 정리, 원칙과 목표는 물론 추진방안을 마련¹⁹⁾

- 독일 BMELV(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은 EU의 새로운 개혁안이 마련되어 발효될 공동농업정책의 시행에 앞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환경, 소비자를 둘러싼 협의를 진행, 쟁점을 정리하여 2012년 1월 발표

19) 이명헌은 소통의 시대, 공감의 농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를 가진 다양한 집단들을 들러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주인으로 보고, 그 주인들을 필요할 때마다 광장으로 초청해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함께 참신한 답을 찾도록 이끄는 유능한 조정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독일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농민신문 [시론-이명헌] 소통의 시대, 공감의 농정. 2013.5.08.에서 발췌

- 2011년 3월, BMELV에서 인터넷 대화광장을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여 농업관련 부가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에 걸친 분야별 협회, 정당, 언론인은 물론 종교인, 노조 대표자들까지 아우르는 워크숍도 진행
 -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농정이 풀어야 할 문제와 다양한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주제들이 갈등하고 있는 쟁점 주제들을 파악
 - 현장은 채택동기와 과정, 비전과 원칙은 물론 ①매력적인 전원 공간 보호와 가치창조 보장, ②농지이용 목적에 따른 갈등 해결과 부족 자원 보호, ③가축사육과 동물복지 분야에서의 지속발전, ④식품안전 보장과 소비자를 위한 투명성 향상, ⑤세계식량 안보와 공정 무역 보장 등 다섯 가지 실행 영역별로 현 상황, 달성해야 할 목표, 추진방안 등을 정리
 - 특히 추진방안에서는 제도와 정책사업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순위에 뒤야 할 연구와 지식이전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
- 현장 제정 과정에서의 민간주도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쟁점과 목표의 도출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임
- 독일 연방정부 주무부처의 명칭부터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로서 국민농업이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 현장을 채택하는 과정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열린 대화와 협의를 통하도록 하고 의견대립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진행한 논쟁을 그대로 노출하여 작성
 - 국민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문제제기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까지 포괄하는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 할 부부임

농업과 소비자를 위한 헌장(Chartha für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

농업과 소비자를 위한 이 헌장은 농업을 중심으로 가공, 판매 등 농업의 전후방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농업 및 식품산업을 위한 정치적 실행분야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이 헌장은 소비자들의 요구까지도 아우른다. 이 헌장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쟁점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각각의 실행분야 속에는 우선적 조치들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으며, 이 조치의 개선에 대한 검토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최초 검토는 2014년)

모든 실행분야는 다음의 질문을 포함한다.

-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다음해에 우리는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열린 대화 채택으로부터의 시작과 동기

이 헌장은 2011년 3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된 다양한 사회적 이익단체의 대표자들 사이의 집중적인 교류를 통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식품판매업, 식품생산업, 종교계, 노동조합, 기초자치단체,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개발원조단체 등을 비롯한 독일연방의회 의원들과 경제학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환경보호, 가축사육, 식량안보 그리고 식품안전과 같은 농산업의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많은 해결책들이 제안되었으나, 동시에 쟁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BMELV(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원문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토론은 농업과 소비자를 위한 본 헌장을 제정하는 동기가 되었다(www.bmelv.de/Charta 참조).

식량과 농업 생산물, 그리고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식품업계가 점차 기계화되고 분업화 되어가는 것과 사람, 동물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적 식량생산에 대해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유럽 농업 및 식품산업의 국제적 상호연대는 공익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동물보호,

생물다양성보존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에서 많은 진척이 있어 왔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성과를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용인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과 식품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한 부분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공헌을 해야 한다.

- 국민에게 양질의 식료품 제공, 보장
- 문화경관의 조성 and 자연적 기반 보호
- 농촌 지역에서의 경제 및 삶의 질 향상
- 국민경제의 에너지 공급과 재생가능 원료의 활용

현대 농업정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생산력이 있고, 경제적 생존능력이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자원을 보호하는 그리고 효율적인 경제 방식을 생각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적 소비자정책은 안전성과 자치를 보장한다. 소비자들은 우리의 복잡한 경제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소비를 자기책임으로 둘 수 있어야 한다.

도전과제와 기본원칙 정의

농업과 식품산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도전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 전 세계적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는 기근에 시달리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반면, 중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신흥성장국가에서는 양질의 식료품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생산물이나 에너지원료로서 사용 될 재생가능한 원료의 생산은 재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동시에 전 세계 인구수 증가로 인해 1인당 식량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1950년 당시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약 5,000m²의 사용 가능한 경작지가 있었던 반면, 2008년에는 사용 가능한 경작지가 2,200m²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기후변화는 식량생산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 외에도 수자원과 같은 중요한 자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 독일 농업과 식품산업의 집중 및 특화 과정은 이와 관련된 갈등 - 특히 환경, 동물 및 자연 보호 - 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한다. 수용과 상호 이해가 증대되어야 한다.
- 향후 국가적, 유럽적 그리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농업 및 식품산업을 위한 기본 틀을 형성하는 데 있어 농업정책 이외 소비자, 에너지, 환경 또는 재정정책과 같은 정책분야가 오늘날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분야에서의 연관성을 갖고 정책추진방향은 서로 일치해야 할 것이다.
- 국제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다. 농업시장에서의 무역제한은 사라질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신흥성장국가들은 농업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독일의 농업 및 식량경제는 이 경쟁에 응해야 한다.
- 인구통계적 변화와 인구 밀집지역의 경제 인력 집중은 향후 국가 차원의 발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관계까지 다룰 수 있는 향후 정책적 행보는 다음의 기본원칙들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는 오직 지속가능한 생산증가를 통해서만 충족시킬 수 있다.
- 식품안전은 식품업계의 모든 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소비자가 잘못된 또는 애매한 상품표기로 인해 착각하거나 혼동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반드시 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상품과 생산과정 품질에 대한 명확한 표기는 상품구매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 식품에 대한 높은 평가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자산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는 건강한 먹거리, 먹거리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소비자 인식증진을 통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먹거리는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 모든 식품관련 업계에서 먹거리 낭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 농업정책은 전세계적 식량안보의 향상을 추구해야 하며, 또한 영양섭취 측면에서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숙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합의적, 자원보호적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동시에 농업에 있어서 다양성화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척박한 자연적 조건 속에서 문화경관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존하는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 식량생산을 우선순위에 두지만, 동시에 농작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고려하는 농지활용
 - 계속되어 온 독일 내 농업용지의 농업 외적 활용에 대한 적극적 제한 및 축소
 - 전반적인 복지 개선에 대한 다른 경제분야 대비 농업종사자들의 몫
- 연구와 연구응용은 실무현장에서의 발전과 혁신을 도출하는 변화의 기반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생산 단계에서의 혁신뿐 아니라 동시에 에너지 원료 사용의 혁신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이익도 포함된다.
- 혁신과 학문적 지식은 국가, EU 그리고 전 세계 차원에서의 관련유효 규정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 분야와 행정업무는 도를 넘는 관료주의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독일의 정책적 행보는 동물보호라는 국가적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연구와 자문은 동물 사육자에게 있어 경제성에 대한 문제와 동물복지와 같은 동물 및 환경보호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 독일의 현대 농업 및 식품경제에는 다양한 경영 형태 및 규모가 존재한다. 이에 농업인적 경영방식 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영방식의 핵심축은 사유재산뿐 아니라 후

속 세대에도 책임을 다하며, 농지 기반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이를 통한 지역 경제생태의 기회를 활용하는 기업들이다.

실행분야 규정

BMELV(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의 농업과 소비자 정책은 다음 5가지 중심 실행분야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1. 매력적인 전원 공간 보호와 가치창조 보장
2. 농지이용 목적에 따른 갈등 해결과 부족 자원 보호
3. 가축 사육과 동물복지 분야에서의 지속발전
4. 식품안전 보장과 소비자를 위한 투명성 향상
5. 세계식량 보호와 공정 무역조건 보장

실행분야는 다음의 5개 착수항목을 포함한다.

1. 목표 달성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국내, EU, 세계 차원에서의 **법적 기반 마련**.
2.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법률 개선**. 이와 더불어 연방제 구조와 권한 분할에 있어 연방차원에서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간 공동 업무를 추진하는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3. 사회의 자율적 조정에 의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경제인들과 문제 해결 지향적 토론 및 대화의 진행. 이를 통해 갈등 또는 오류들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각각의 그룹들을 조기에 현안 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임.
4. 향후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특정 국가적 인센티브시스템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착수.
5.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한 해법 강구, 대책의 효과성 분석 및 실제 현장 속 기술 혁신 전환을 위한 연구 강화와 집중 및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응용 장려.

2. 국민농업헌장의 제정 절차 및 과정

□ 민간이 주도하여 제정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제정

-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기구 또는 단체에서 주도하여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에서는 민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와 미래비전을 담고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국민농업헌장은 민간이 주도하여 제정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임
- 국민농업포럼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식품부의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되어, 국민농업헌장을 제정키로 함

□ 민간에서 주도하여 국민농업헌장 초안을 작성

- 연구팀에서 농업농촌의 가치 및 이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각계각층 간담회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농업헌장 초안을 작성
- 국민농업헌장 초안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후 이를 정비하여 작성함
- 또한, 농업인의날 행사추진위원회,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등에 국민농업헌장의 제정사실을 알려 이에 대한 기본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였음. 최종 작성 이전에 단체 및 전문가에 이를 발송하여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음
-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르게 참여하고 있는 국민농업헌장제정위원회를 통해 추진방향을 정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 안을 마련

- 연구과정에서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국민농업헌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 및 활동가, 정부, 학계, 연구자 등 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1회 개최함
 - 공청회는 국민농업헌장 제정연구를 통한 연구 내용, 국민농업헌장 초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농업인 중심의 전반적인 시각을 교정하고 각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민농업헌장 제정을 위해 농업인단체,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5회 이상 개최함
 -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농업헌장 선포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국민농업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단체 등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형성을 위한 노력 지속
 - 당초 국민농업헌장의 필요성 호소하고 국민적 참여를 동참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통해 선포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인의날 행사추진위원회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동의가 형성되지 못하여 무산됨
 - 농업인단체에 대한 이해와 동의 형성을 위해 단체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꾸준히 시행할 계획임. 국민농업헌장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극복해야 함
 - 또한 국민농업국민공감농정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이를 채택하여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식화하여야 할 것임

3. 국민농업현장의 구성 및 특징

□ 국민농업현장의 구성

국민농업 현장의 구성	
전 문	1) 환경, 식량, 에너지 위기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
농업·농촌의 가치	2)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 국민인식에 부응하는 역할
국민농업의 비전	3) 국민이 함께하며 지탱하는 국민농업의 비전
국민 실천 강령	4) 사회 각 부문과 농업·농촌의 연계 방안 5) 계층, 연령별 국민농업 실천활동과 참여방안

- 국민농업현장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 실천 강령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세부적으로는 5가지 영역임
- 전문은 복합적 위기에 처한 국제사회가 극복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가치에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도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농업에 대한 긍정적 선언으로 시작하고 국민농업 현장을 제정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음
- 농업·농촌의 가치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5가지 테제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조명하여 정리
- 농업·농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비전을 제시함. 생산자, 소비자,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기술하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사회상을 제시함
- 실천 강령은 두가지임. 그중 하나는 우리 사회 각 영역과 농업·농촌의 연계방안을 제시한 것임.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로 굳어져 칸막이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농업·농촌은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자연스럽고 접촉면도 상당히 큰 분야이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려야 할 것임.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노동,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와 농업·농촌의 연계 방안을 기술

- 실천 강령 중 또 다른 하나는 연령별 실천활동임. 국민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활동이 제시되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공무원 윤리 현장의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는 실천활동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음. 추후 국민농업현장과 연동된 연령별로 구체화된 실천강령을 작성하여 전국민이 국민농업을 실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함

□ 국민농업현장의 특징

-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담은 연구 보고서 등이 많이 제출되었지만 농업계의 시각을 중심으로 기술된 것으로 치부되고 말았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접근하지 못함
- 소비자와 생산자, 도시와 농촌, 미래 세대와 자연 생태계를 아우르는 건강한 먹거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가치와 이상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의 지표를 밝히는 국민 농업 현장을 제정
- 국민농업현장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제정 이후의 과정에서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노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농업·농촌의 연계점을 모색하고 공동 발전 방향을 제시
-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제시하여 현실성을 높임

4. 국민농업현장(안)

□ 국민농업현장(안)

국민농업 현장의 주요 키워드		
전문	세계화, 기후변화, 환경, 식량부족, 에너지(자원) 고갈 지속가능성, 다기능성	
농업·농촌의 가치	안전한 먹거리, 식량주권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 지역사회 유지 및 일자리 제공 통일기반 형성, 인류평화 기여	
국민농업 비전	국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실현하는 국민농업 안전한 먹거리, 식량안보(식량주권/식료보장)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도농상생과 순환 공동체	
부문연계	교육	식생활교육(식습관개선, 텃밭-작물재배)과 농촌체험
	문화	전통보전(전통문화, 전통식품)과 도농교류(농촌체험)
	복지	삶의질향상과 친환경먹거리
	환경	생태·환경보전(생태보전, 생물다양성, 경관유지)
	노동	생활협동조합,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유지)
	경제	국내산농산물(소비촉진, 인증표시제), 지역먹거리, 생활협동조합
연령별 실천	어린이	식습관개선, 아침밥먹기
	청소년	텃밭-작물재배와 농촌체험
	청년	농촌봉사활동, 농촌체험과 아침밥먹기
	중장년	국내농산물 소비촉진, 도농결연, 지역먹거리, 텃밭(작물재배)
	노년층	재능기부, 전통유지(문화, 식품), 텃밭(작물재배)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국민농업헌장

전 문

농업은 생명의 원천이요, 살림의 근간이다. 농촌은 생명의 터전이요, 생태 환경의 보루이다. 그러나 농업과 먹거리 체계의 세계화, 기후 변화, 자원의 고갈, 경제 불안 등 지구적 차원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물론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선진 각국은 농업·농촌을 공공재로 인식하여 다양한 보호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성,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농업·농촌을 사회적 공통 자원으로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역할을 살리는 일에 다 함께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국토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와 생산자, 도시와 농촌, 미래 세대와 자연 생태계를 아우르는 건강한 먹거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의 지표인 국민 농업 헌장을 제정한다.

농업·농촌의 가치

농업·농촌은 국민 경제와 국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기본 요건이다. 농업은 우리 사회의 기초 산업이자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할 생명 산업이다. 농촌은 생명

의 터전으로, 잘 가꾸고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유산이다.

1.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장한다.
2. 대기 정화, 수자원 함양, 생물 다양성 및 자연 자원의 보호를 통해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보전한다.
3. 다양한 생명체의 보금자리인 농촌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4. 의식주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기초 재료를 생산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사회의 유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5.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 기반을 형성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

국민 농업의 비전

국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한다. 생산자인 농민은 서로 협동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 소비자인 국민은 농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먹거리의 품질은 물론 정보도 함께 제공받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국민의 식량권 보장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농민의 삶의 질과 소득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지역 경제가 순환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명 공동체를 건설한다.

국민 실천 강령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단체·개인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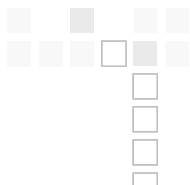
1. 교육: 씨 뿌리고 가꾸며 수확하고 조리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가정·학

교·지역 사회에서 건강·환경·배려의 식생활 교육을 실천한다.

2. 문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우수한 우리 음식의 멋과 맛을 알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농촌 체험, 도농 교류의 생활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3. 복지: 친환경 먹거리와 지역 먹거리를 확산시켜 영양과 안전이 확보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환경: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가꾸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다양한 생물이 조화를 이루며 순환하는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도록 노력한다.
5. 노동: 농업과 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 공동화와 도시 밀집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 사회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6. 경제: 사회 전반에서 협동을 장려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와 상호 협력으로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체계와 소비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깨끗한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우리 국민은 각 세대별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먹거리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식습관을 가진 건강한 어린이
2.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감사하는 청소년
3. 생명 존중과 공동체 가치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
4. 도농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중장년
5. 미래 세대에게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는 어르신



제5부

발전방향 도출 및 정책제안

1. 국민농업헌장 활용도 제고 방안

□ 국민농업헌장의 공식화 및 국민제안 필요

- 국민농업헌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의 공식화를 통한 국민 제안 절차가 있어야 함
- 국민농업헌장의 제정과정에서 국민에게 열린 과정을 표방하였으나 민간 단체의 역량이 제한적이므로 이를 공식화하고 국민에게 제안함으로써 정당성과 공신력을 획득하여야 함
- 포럼에서 기본 연구 및 제정위원회를 거쳐 국민농업헌장을 만들었으나 공식화 및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음
- 이를 공식화하고 국민에게 제안하는 방법으로 두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병합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음
- 첫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관협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국민농업헌장을 공식화하는 방법임.
-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정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출범한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농업헌장 제정 취지와 동일함.
- 다양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발전과제를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제시하는 국민농업헌장의 대국민 제안자로서 적절함
- 또한,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일반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시 여론조사와 정책공모를 실시하는 등의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민농업헌장의 확정 및 연계된 실천 활동을 개발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는 방식임. 법률 등 제도와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원 등의 방식으로 국회에 요청하여 국민의 뜻으로 공식화하는 방법임
- 청원은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가장 공식적인 방식으로 피해구제와 부당한 행정의 시정, 법률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농업현장을 선포하여 공식화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앞서 제시한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의 의결 및 국민에 대한 제안 이후 국회 청원을 통해 공식화 하고 제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청원의 경우 절차와 과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채택되는 경우가 매우 저조한 단점이 있으므로 치밀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알리는 교과서로 활용

- 농업·농촌의 당면한 현황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인식해야 할 농업·농촌의 가치,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생명공동체를 건설하는 국민농업의 비전을 담고 있어 자체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알리는 기본 문서임
- 또한 농업과 우리 사회 각 부문과의 연계 및 연령별 실천사항을 기술한 국민 실천 강령을 담고 있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구체화된 실천 사항을 제시하여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이 국민농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상이었으나 소비자단체 등 주요 시민단체의 임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홍보하여 이들이 자발적인 국민농업운동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체계적인 공식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학생들의 배우는 교과서에 실어 소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교육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익히게 된다면 가장 튼튼한 농업·농촌의 발전 토대가 구축되는 것임.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기의 실천사항인 식생활교육 및 농촌체험, 작물재배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 및 활력제고를 위한 범국민운동 연계하여 시행

- 농업·농촌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회적인 홍보가 아니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꾸준한 범국민운동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농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국민농업현장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국민의 참여와 실천의 지표를 표방하고 있으나 선포 이후 연계활동이 부진하다면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우려가 많이 제기 되었음
- 국민농업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가치 홍보 사업과의 연계, 설명자료를 포함한 홍보물의 제작·배포는 물론 실천 활동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하여 전개하여야 할 것임

2. 국민참여형 실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국민농업현장을 부처간 협업과제로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검토

- 정부는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고자 함
- 특히,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전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음
- 부처간 협업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국민농업현장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사회 각 분야와의 연계는 직접적으로 부처간 협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음. 농식품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협업과제 5개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타부처와 협업과제로 17개 과제를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부처간 협업과제는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농업현장의 내용 중 국민 실천 강령 부분을 각 분야별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범부처 공동 표준식생활지침 개발기준 마련(복지부, 식약처), 농촌형 교통모델 마련(국토부), 음식관광 활성화(문체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그린카드 연계(환경부) 등은 국민 실천강령과 연계할 수 있는 기존 협력 과제임
- 6개 분야별 실천 과제별로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구체화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함

□ 농업·농촌 가치홍보 사업과 연계, 협력

- 국민농업현장의 기본 인식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소통과 참여를 확보하는 것임
- 정부에서도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 및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일반국민들이 참여를 통해 이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다원적 가치 확산 캠페인 전개,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 재능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정부3.0 시책에 맞춰 농식품 분야의 분산된 홍보DB를 통합 관리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하는 농업농촌홍보데이터베이스(농업농촌PRDB)를 개통
- 국민농업현장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 홍보 분야의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 농업·농촌 가치 홍보사업의 주요 주제로 국민농업현장에 대한 홍보와 실천활동을 선정하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홍보활동에도 국민농업 현장을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국민농업현장과 연계한 연령별 실천 활동 개발 연구 진행

- 국민농업현장의 연령별 실천 활동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각 과제를 5개 세대별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농업·농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년, 청년층 등 미래세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 그러나 구체적 실천활동을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완성된 형태는 아님
- 이는 5개 연령대별로 구체화된 5가지 내외의 실천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함. 추가적인 연구 또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5개 연령대별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지를 개발하여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배포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참여형 범국민운동 전개

- 국민농업현장은 넓고 깊은 뜻을 담고 있으나 그 자체로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그침
- 현장의 상징적 의미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계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외국의 다양한 선진 사례 및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 국민농업현장과 연계한 식생활지침을 실천하는 범국민 생활실천운동 전개, 재능나눔을 통한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과 같은 형태 또는 그 이상의 역량을 결집한 범국민운동의 개발 및 전개가 필요함. 특히, 그동안 진행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합 또는 체계화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부 록

<전문가 설문조사지>

국민농업현장 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조사는 농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국민농업포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민농업현장제정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국민농업현장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각종 지표가 양적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전략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움직이는 국민농업의 필요함을 조명하고, '농업·농촌'의 가치 및 미래비전과 국민농업실현을 위한 계층, 연령별 실천활동과 참여방안을 담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전 문	1) 환경, 식량, 에너지 위기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 2) 국민이 함께하며 지탱하는 국민농업의 중요성 3)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 국민인식에 부응하는 역할
부문연계 및 실천항목	4) 사회 각 부문과 농업·농촌의 연계 방안 5) 계층, 연령별 국민농업 실천활동과 참여방안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실천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분석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02-3471-4245, 010-2216-4915, (팩스) 02-3471-4270, (이메일) limnong@naver.com로 연락주시시오. 감사합니다.

국민농업포럼 임성규 드림

※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성 별	①남	②여			
연 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이상
관련(전공)분야	①농업	②농촌	③농민	④식품	⑤농업·농촌 외
현재 소속분야	①대학·연구기관 ④컨설팅	②정부·공공기관 ⑤기업	③단체·활동 ⑥기타		

1. 농업·농촌의 역할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농업의 관점에서 적절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농업·농촌의 역할과 다원적 가치	아니다 ← →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식품의 안전성 보장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4) 농업농촌 경관 유지·보전					
5)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6) 여가 및 체험 공간 제공, 힐링과 건강한 삶 기여					
7)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제공					
8) 지역사회 유지, 도시문제 완화					
9) 통일 촉진, 통일 기반 형성					
10) 저개발국 농업발전 기여, 기아 및 빈곤 해소					
11) 농업·농촌의 역할과 다원적 가치 중 국민이 함께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2.. 아래 각 국민운동을 참조하여 국민농업 실현을 위해 부문별로 농업과 연계되는 키워드를 2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부문	선택1	선택2	부문	선택1	선택2
1) 교육부문			2) 문화관광부문		
3) 보건복지부문			4) 환경부문		
5) 고용노동부문			6) 경제부문		

3. 아래 각 실천활동을 참조하여 국민농업 실현을 위하여 연령층별 실천활동들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부문	선택1	선택2	부문	선택1	선택2
1) 어린이,청소년(10대)			2) 청년층(20~30대)		
3) 중년층(40대)			4) 장년층(50대)		
5) 노년층(60대 이상)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농업 운동 및 실천활동 (참조)	
국내산 농산물	1-1)소비촉진 1-2)인증표시제
바른 먹거리	2-1)친환경먹거리 2-2)지역먹거리 2-3)슬로푸드
도농 교류	3-1)농촌체험 3-2)농촌봉사 3-3)도농결연
식생활교육	4-1)아침밥 4-2)식습관개선 4-3)텃밭, 작물재배
생태·환경	5-1)생물다양성 5-2)생태보전 5-3)경관유지
전통보전	6-1)전통문화 6-2)전통식품
삶의질	7-1)환경 및 기반구축 7-2)접근성 제고 및 격차해소 7-3)복지전달체계 7-4)재능기부
기타	8-1)생활협동조합 8-2)먹거리·학교 급식 8-3)도시농업 8-4)에너지절감, 자립 8-5)통일농업 8-6)국제교류 및 지원

- 설문에 참여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강동원 외(2013),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동원 외(2013), 농업·농촌 국민의식 변화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양구 외(2009), 밥상혁명, 살림터
- 김용렬 외(2013),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윤성 외(2014),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농협경제연구소
- 김정호 회(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13), 국민공감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 홍보 현황 자료,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스마트농정분과 회의 자료집
-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이창우(2013), 북미의 도시농업 트렌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 정기수 외(2014), 농업·농촌 유망일자리 발굴 조사 연구, 농촌진흥청
- 정영일(2014),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20년, 한국 농업·농정의 회고, 전망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 정재돈(2008),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와 농업·농촌의 가치, 국민농업포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0), 농어민의 날 제정방안, 농어민의 날 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 황수철(2011), 한국 농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2011대안농정대토론회 자료집
- 황수철(2014), 농정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미발표
- 황명철(2010), 일본의 농업·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농협경제연구소

